보도자료

2026년 3월 26일 공보 2026-03-23호

이 자료는 3.26일 11:0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금융안정 상황(2026년 3월)

□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2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 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4월 14일 예정)

붙 임 : 금융안정 상황(2026.3월)의 주요 내용

[문의처]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팀 장 김정호 (750-6834)
차 장 김자혜 (750-6840)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팀 장 윤대혁 (759-4482)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팀 장 최재혁 (759-5773)
[공보관] 02-759-4016,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 붙 임 >

금융안정 상황(2026.3월)의 주요 내용

차 례

Ⅰ. 종합 평가 **1**

Ⅱ. 부문별 상황 **4**

1. 가계 및 기업 신용 **4**

<BOX 1>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8

2. 자산시장 **10**

<BOX 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13

3. 금융기관 **14**

<BOX 3>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현황 19

<BOX 4> 증권회사로의 자금 유입 동향 20

4. 대외부문 **21**

5. 금융제도 및 정책 **24**

<BOX 5>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과제 25

[참고] 금융안정 주요 리스크 분석 **27**

<참고 1> 중동상황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27

<참고 2> 주요 취약요인을 고려한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9

<참고 3> 기업의 비차입금 부채 활용 현황 점검 34

<참고 4> 고위험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36

<참고 5>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상황 평가 38

[부문별 담당팀 및 집필자]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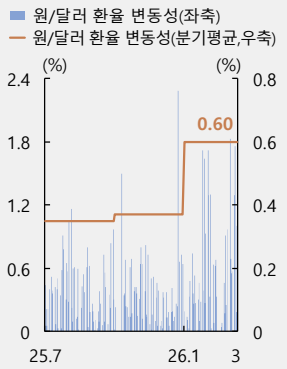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금융안정 상황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외환·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함께 취약부문 부실 장기화, 금융불균형 축적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변화, AI버블 경계감 등에 따라 자산가격 조정, 머니무브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1] 경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부문별 양극화로 인한 영향과 자금조달 애로 등이 가중되면서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하겠다.[2][3]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약화되었으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정책공조를 통해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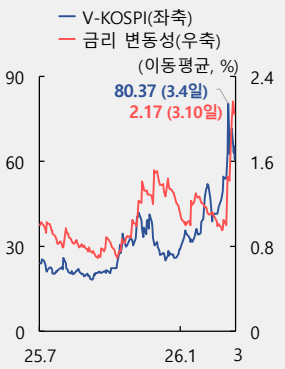
1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내외 충격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기관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

환율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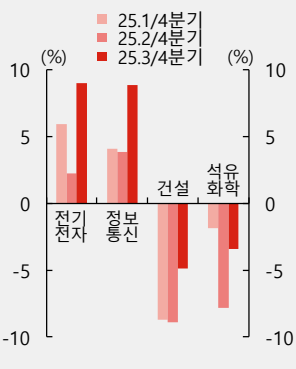
주가 및 금리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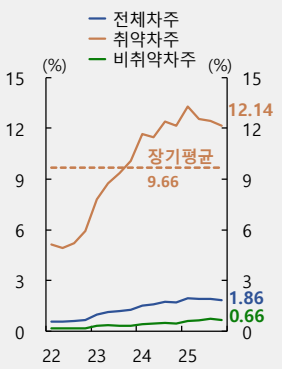
2 성장 양극화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증대

장기간 업황부진을 보인 업종 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

업종별 매출액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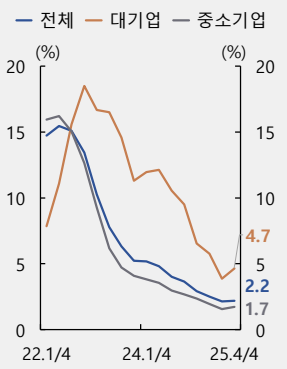
자영업자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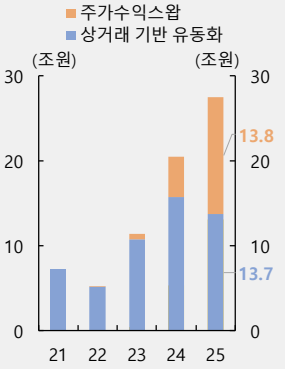
3 기업부문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

기업 자금조달이 부진한 가운데, 일부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우려

기업규모별 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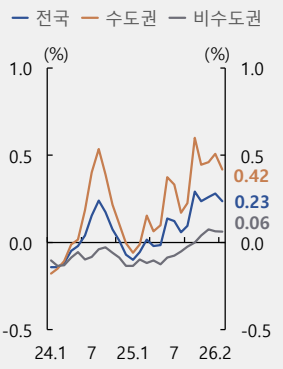
기업의 비차입금 부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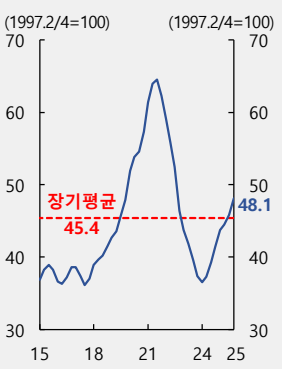
4 금융불균형 누증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 및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위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금융취약성지수(F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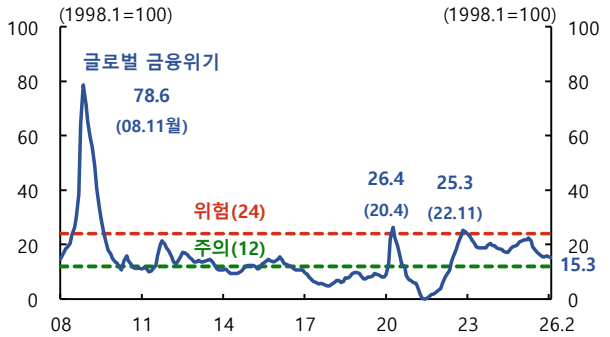


Ⅰ. 종합 평가

1.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외환·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함께 취약부문 부실 확대, 금융불균형 축적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1]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AI버블 경계감 등이 부각될 때마다 국내외 자산가격 조정 및 머니무브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부문별 양극화로 인한 영향과 자금조달 애로 등이 가중되면서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하겠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약화되었으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이 잠재해 있어 정책공조를 통해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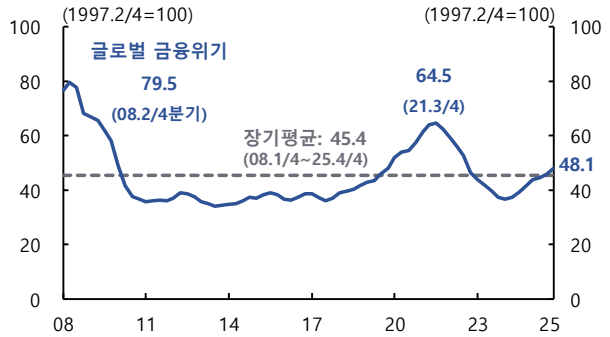
금융시스템의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2]는 2026년 2월중 15.3으로 주의단계(12~24)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다.[3]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4]는 2025년 4/4분기말 48.1로 서울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 등에 따라 상승하면서 장기평균을 소폭 상회하였다.

[그림 1] 금융불안지수(Financial Stress Index)
최근 하락세에도 여전히 주의 단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금융취약성지수(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하면서 장기평균을 소폭 상회



자료: 한국은행

2.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은 증가세 둔화흐름이 지속되고 기업신용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5년 4/4분기중 가계대출은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용경계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따라 비은행·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율이 지속되었다.

---

[1] 자세한 내용은 <참고 1>「중동상황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참조
[2] 금융불안 관련 금융시장, 실물, 대외, 은행, 비은행 부문의 20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로,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각각 12와 24이다.
[3] 3월 현재까지 입수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3월 FSI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중장기 금융취약성 상황을 나타내는 3개 평가요소(신용, 자산가격, 금융기관 복원력)와 관련된 64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한편 2025년말 GDP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5] 비율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부동산 · 건설업 대출 감소 전환, 부동산PF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2023년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3. 가계 연체율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기업 연체율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계 연체율이 장기평균에 근접한 수준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약차주 비중은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등에 따라 감소하다가 연말 소폭 증가하였다.[6] 기업 연체율은 비은행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움직임 등에 따라 지방 건설 · 부동산, 철강 · 석유화학 등 장기간 업황부진을 보인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4. 자산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며, 주가는 사상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한 후 중동상황 이후 큰 폭 조정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9월 중순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상승 전환한 이후 연초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수급 부담 등에 더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 이후 신용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약화되면서 확대되었다. 주식시장은 금년 들어 견조한 반도체 수요,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사상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중동상황 발생으로 큰 폭 조정되면서 변동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가상자산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국내 투자자의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동상황 발생 이후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외 이벤트 및 시장 기대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 움직임이 크게 확대되고 시장간 연계를 통해 외환 ·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5.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최근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비수도권은 지난해 10월 상승 전환한 이후 완만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10.15대책 직후 잠시 위축되었던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개되면서 서울 선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가 최근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계획 발표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고 가격상승 기대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이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가 더딘 속도로 진행되는 등 상대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다. 한편,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5] 금융기관을 통한 부동산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보증 및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포괄한다. 자세한 내용은 <BOX 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참조

[6] 한편,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그간의 자산가격 상승,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4>「고위험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참조

6.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업권별로 차별화된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며,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부동산PF 구조조정, 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향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경기회복세 개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가능성과 성장 양극화 흐름 속에서 취약부문의 업황 개선 속도 등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본비율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규제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유동성비율도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7. 대외부문에서는 환율이 중동상황 발생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외화 자금조달 여건과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한 · 미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엔화 약세,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7] 등으로 큰 폭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말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후 글로벌 달러지수 및 엔화 흐름 등에 따라 등락하다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크게 상승하였다. 외화자금시장에서 외화차입 단기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다. 투자거래의 경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순투자 흐름이 전년대비 확대되고,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연초 채권자금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주식자금 유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년 2월중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대외지급능력은 단기외채 비중이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8.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내수회복 속도,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파급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머니무브 등 대내외 요인이 맞물리면서 최근 높은 수준의 외환 ·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성장 양극화,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취약부문 부실이 확대 · 장기화되고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복원력을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잠재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8] 특히, 그간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성장한 글로벌 사모신용의 영향 등 비전통적 금융수단과 연계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 등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완화되고 있으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산되면서 금융불균형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높은 경각심을 갖고 정책공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9. 한국은행은 외환 ·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및 성장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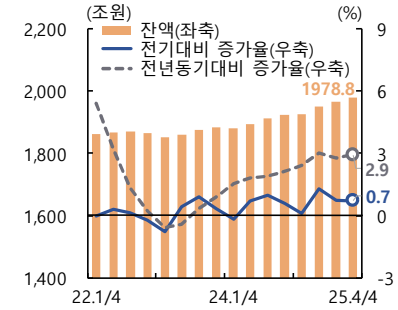
[7]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참고 5>「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상황 평가」 참조
[8] 자세한 내용은 <참고 2>「주요 취약요인을 고려한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참조

Ⅱ. 부문별 상황

1. 가계 및 기업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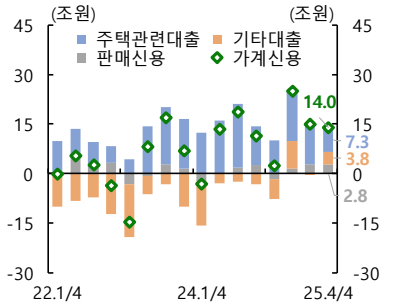
1. 가계신용은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상환 부담도 소폭 완화되었다. 2025년 4/4분기중 가계신용[9]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0.15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7.3조원)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율(+0.7%)이 소폭 하락하였다(가계신용통계 기준).[10] [그림3, 4] 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세가 확대되며 전분기대비 하락(140.9%→139.8%)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5]

[그림 3] 가계신용
가계신용은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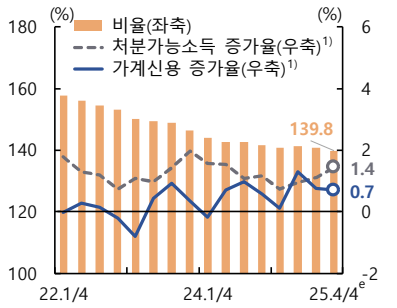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가계대출 유형별 증감[1)]
주택관련대출 증가폭 축소



주: 1) 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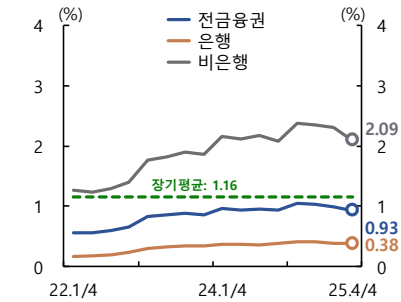
[그림 5] 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
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 하락



주: 1) 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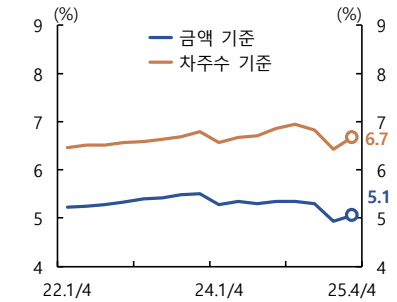
2.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취약차주는 다소 늘어났다. 2025년 4/4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0.39%→0.38%)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비은행(2.31%→2.09%)도 연말 부실채권 정리 영향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낮아졌다(1.00%→0.93%).[그림6] 차주수 기준으로 취약차주 비중은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감소하다가 연말 소폭 증가(6.4%→6.7%)하였으며,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상승세(17.8%→18.0%)를 지속하고 있다.[11] [그림7, 8]

[그림 6] 가계대출 연체율[1)]
비은행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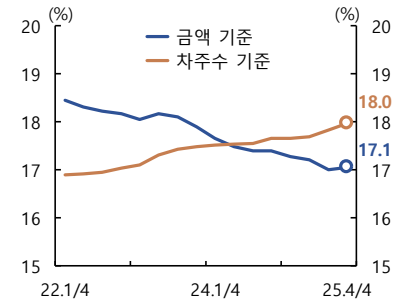
주: 1) 장기평균은 10년 1/4분기~25년 4/4분기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7] 취약차주 비중
차주수 및 금액 기준 모두 소폭 증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그림 8] 잠재 취약차주 비중
차주수 기준 오름세 지속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

9 가계신용통계는 2026년 2월 기초자료 정비에 따라 2018년 이후 시계열이 소급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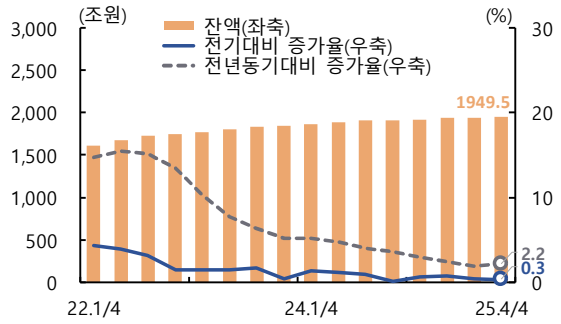
10 월별 가계대출 증감액(전금융권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은 10.15대책 이후 축소흐름을 보이다가 금년 들어 수도권 일부지역의 주택매매 거래 증가 등에 따라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5년 10월 +4.9조원 → 11월 +4.4조원 → 12월 -1.2조원 → 26년 1월 +1.4조원 → 2월 +2.9조원).

11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를, 잠재 취약차주는 취약차주의 특성에 근접한 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를 의미한다. 잠재 취약차주 비중이 금액 기준과 차주수 기준에서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차입금액이 큰 잠재 취약차주가 줄어들면서 1인당 차입금액이 감소(21년 4/4분기말 1.04억원 → 25년 4/4분기말 0.92억원)한 데 기인한다.

3. 기업신용의 경우, 기업대출이 2025년 4/4분기말 기준 2.2%(전년동기대비) 늘어나는 등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그림9] 기업대출을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증가폭이 소폭 커졌으나 비은행은 감소로 전환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대기업은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다.[그림10] 기업대출 연체율은 비은행[12]과 중소기업[13]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그림11] 한편, 직접금융시장 조달의 경우 회사채는 순발행을 이어간 반면 CP는 순상환으로 전환되었다.[그림12]

[그림 9] 기업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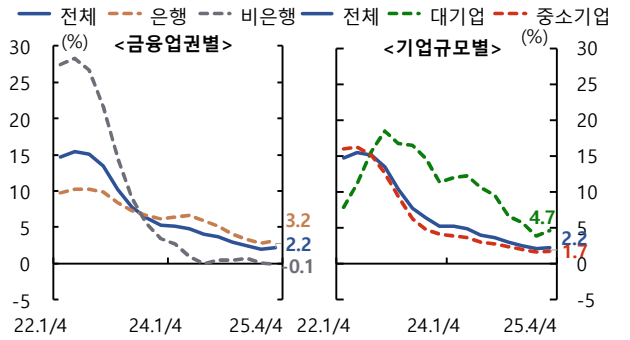
기업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지속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10] 금융업권별 및 기업규모별 기업대출[1] 증가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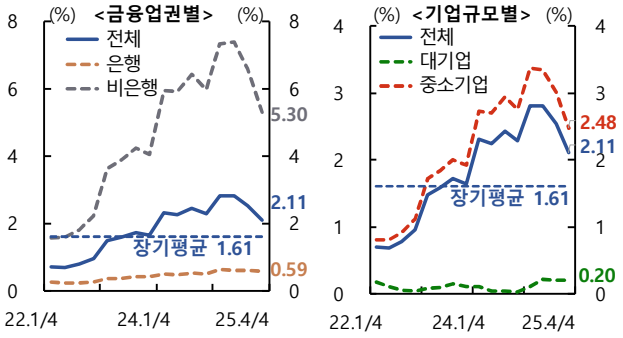
비은행·중소기업 위주로 낮은 증가율 지속



주: 1) 금융 및 보험업 제외
2)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11] 금융업권별 및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연체율[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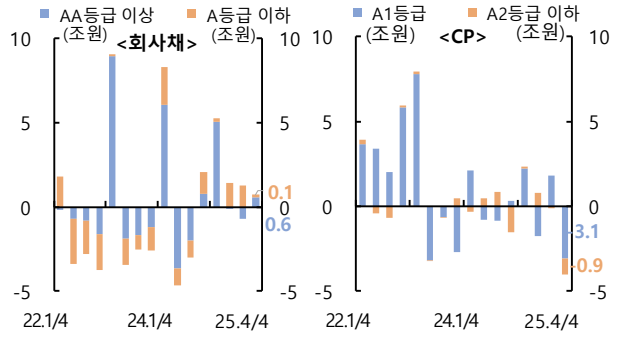
연체율은 하락하였으나 장기평균을 상회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2025년 4/4분기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12]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조달[1)]

회사채는 순발행 유지, CP는 순상환 전환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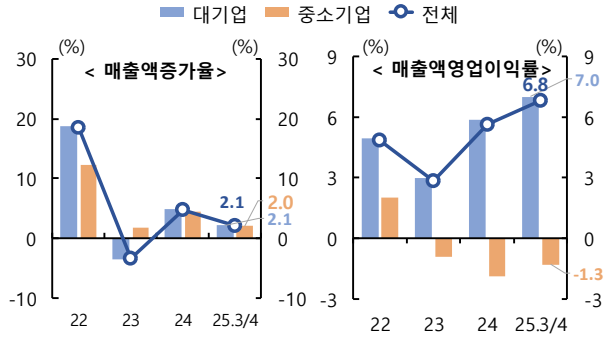
[12] 비은행 세부 업권별로는 상호금융(25년 2/4분기말 9.62% → 4/4분기말 7.05%), 저축은행(10.80% → 7.98%), 여전사(3.28% → 2.83%), 보험(0.85% → 0.83%) 등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하락하였다.

[13] 중소기업 연체율은 개인사업자(25년 2/4분기말 2.14% → 4/4분기말 1.85%, -0.29%p)에 비해 중소법인(4.16% → 2.90%, -1.26%p)의 하락폭이 컸다.

4. 2025년 3/4분기중 기업[14]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수익성과 이자지급능력이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화 양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말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매출액영업이익률[15]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13] 부채비율은 전년말보다 소폭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도 축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그림14] 이자지급능력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상승하는 등 개선되었지만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었다.[그림15]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자보상배율이 전년말대비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영업적자 지속으로 여전히 음(-)의 값을 보였다.[그림16]

[그림 13] 성장성[1] 및 수익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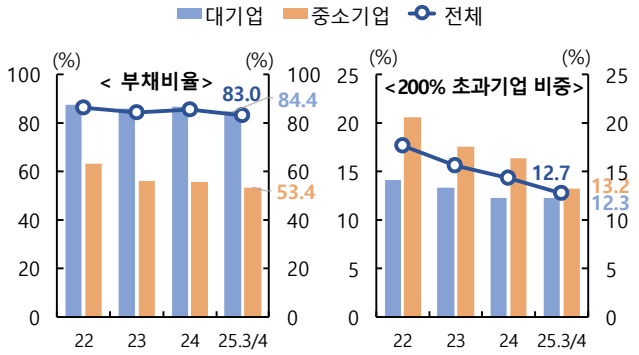
성장성은 하락한 반면 수익성은 개선



주: 1) 매출액증가율(전년동기대비)
2)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자료: Value Search

[그림 14] 안정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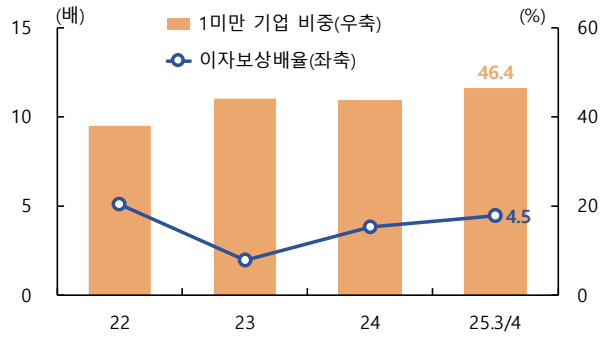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2] 비중의 하락 지속



주: 1)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Value Search

[그림 15] 이자지급능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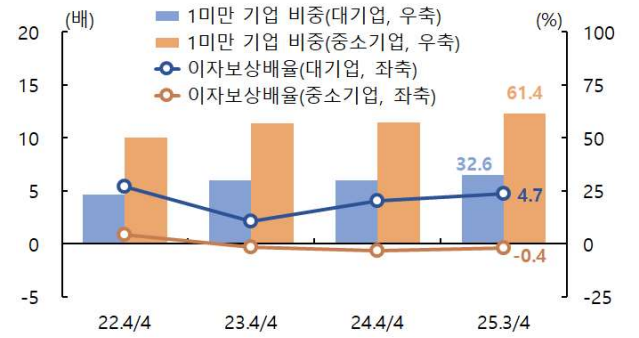
이자보상배율이 상승하였으나, 취약기업 비중도 상승



주: 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자료: Value Search

[그림 16]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마이너스(-) 지속



자료: Value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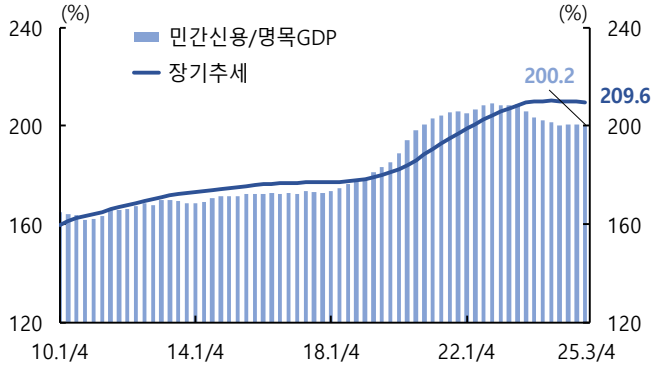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 및 일부 비상장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25년 3/4분기말 기준 2,648개 기업(대기업 1,377개, 중소기업 1,271개)이다.

[15] 업종별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운송장비(24년 4/4분기 6.8% → 25년 3/4분기 12.6%), 전기가스(6.3% → 9.8%) 등에서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운수(10.3% → 6.0%), 자동차(7.6% → 6.5%) 등 업종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5.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2025년 3/4분기말 기준 200.2%로 전분기(200.4%)보다 소폭 하락하였다.[그림17]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89.3%로 전분기(89.7%) 대비 낮아지고,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110.8%로 전분기(110.8%) 수준을 이어갔다. 가계 및 기업 부문 모두 장기평균(가계 83.9%, 기업 98.6%)을 상회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과 비교해도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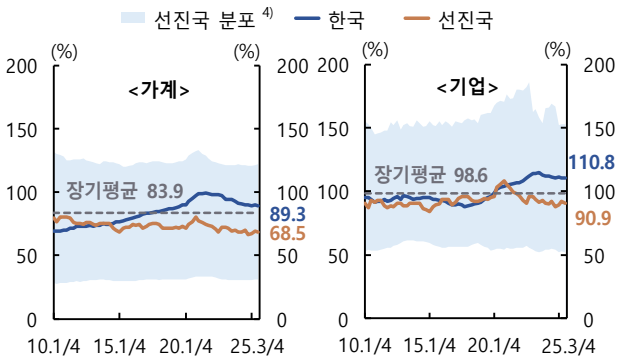
[그림 17] 민간신용[1]/명목GDP[2] 비율

2025년 3/4분기말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소폭 하락



[그림 18] 부문별 민간신용[1]/명목GDP[2] 비율[3]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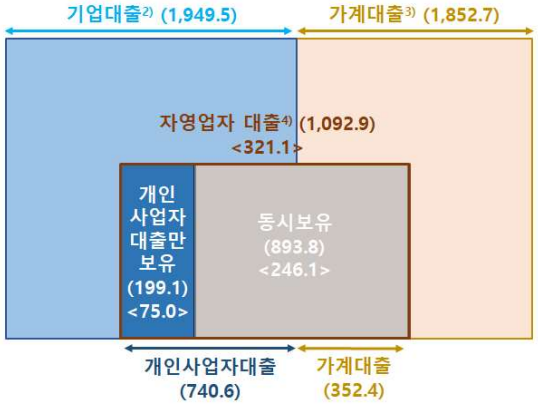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 합계
3)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 ~ 2025년 3/4분기중
4) 선진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 16개국 기준(홍콩은 분포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BIS

<BOX 1>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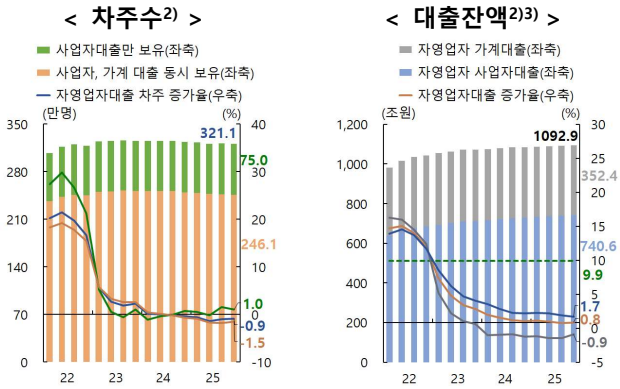
2025년말 기준 자영업자[17] 차주수는 총 321.1만명으로 2024년말(324.1만명)에 비해 소폭 감소[18](-3.0만명)하였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은 1,092.9조원으로 동 기간중 9.1조원 증가[19]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는 둔화(24년말 1.0% → 25년말 0.8%)되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4억원(사업자대출 2.3억원, 가계대출 1.1억원)으로, 전년말(3.3억원)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BOX 1-1] 자영업자 대출 현황[1)]



주: 1) 2025년말 기준, ( )내는 대출잔액(조원), < >내는 차주수(만명)
2)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
3)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4) 가계부채DB 추정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BOX 1-2] 대출 종류별 자영업자 대출 추이[1)]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실선은 차주수 및 대출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점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장기평균(13~25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업권별로는 은행 대출(644.3조원)은 증가세(전년동기대비)가 둔화(24년말 1.1% → 25년말 0.5%)된 반면, 비은행 대출(448.6조원)은 증가율이 소폭 상승(1.0% → 1.3%)하였다. 비은행 세부업권별로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지속[20]하였으나, 상호금융과 보험의 자영업자대출은 전년말보다 증가(각각 2.8%, 2.3%)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는 2025년말 기준 40.4만명(전체 자영업자의 12.6%)으로 전년말(41.3만명)대비 1.0만명 감소[21]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24년말 113.5조원에서 2025년말 114.6조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0.5%)으로 1.1조원 증가하였다.

---

16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발표(25년 12월 22일) 이후 가계부채DB 표본이 기존 약 100만 차주에서 약 235만 차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 관련 시계열이 전체적으로 수정되었다.

17 가계부채DB(약 235만 차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18 자영업자 중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75.0만명으로 전년말대비 0.8만명 증가하였으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는 246.1만명으로 동 기간중 3.7만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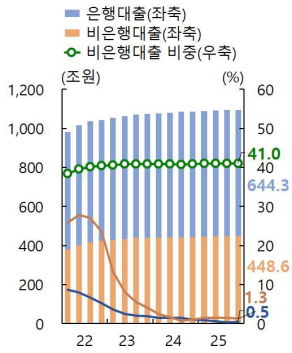
19 2025년중 자영업자 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대출(740.6조원)은 증가(+12.4조원)한 반면, 가계대출(352.4조원)은 감소(-3.3조원)하였다.

20 저축은행: 24년말 -16.5% → 25년말 -20.6%, 여신전문금융회사: 24년말 -0.7% → 25년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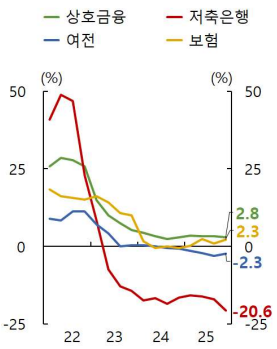
21 자영업자 차주 중 저소득 차주 및 저신용 차주는 전년말대비 각각 1.1만명, 0.5만명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중 다중채무자는 4.5만명 감소하면서 취약차주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BOX 1-3]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대출 추이[1)]

< 금융업권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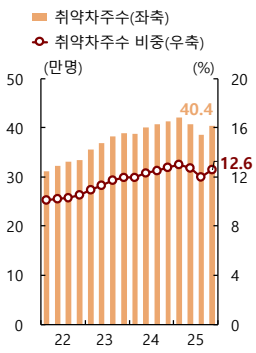
< 비은행 세부업권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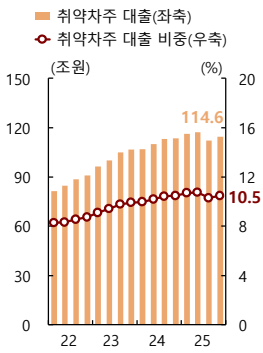
주: 1) 실선은 각 업권별 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BOX 1-4] 취약 자영업자[1)] 차주수 및 대출 추이

< 차주수 >



< 대출잔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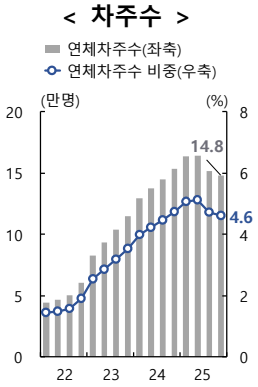


주: 1)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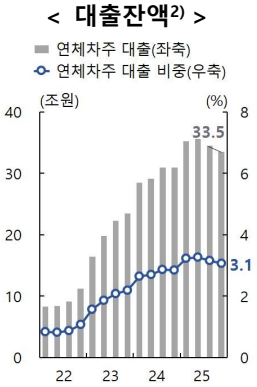
2025년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중 원리금을 연체한 차주(이하 '연체차주')는 14.8만명(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으로, 이들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1%에 해당하는 33.5조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5년말 현재 1.86%로, 비은행(3.64%)과 취약 자영업자(12.14%)를 중심으로 장기평균(12~25년 1.58%)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BOX 1-5] 자영업자 연체차주[1)] 현황

< 차주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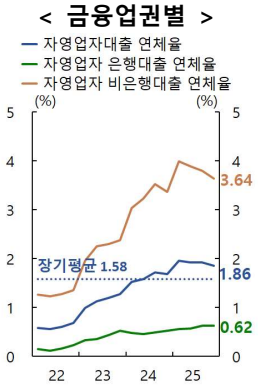
< 대출잔액[2)] >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포함)
2) 연체차주가 보유한 전체 대출(연체+미연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BOX 1-6] 자영업자 연체율[1)] 현황[2)]

< 금융업권별 >



< 취약차주[3)]별 >

주: 1) 대부업 가계대출 제외 기준
2) 점선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장기평균(12~25년)
3)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간의 금리인하 영향과 함께 정부 지원정책[22] 및 서비스업 업황 회복 등으로 연체율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23] 연체율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 등 구조조정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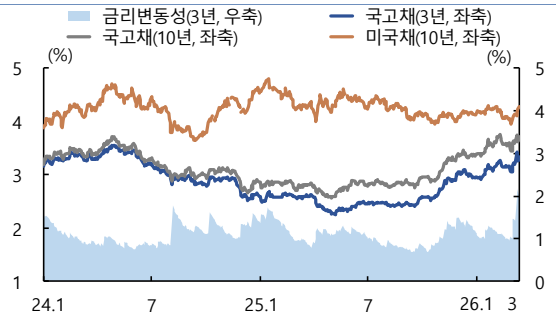
[22] 정부는 2025년중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9.22일 시행)하고, 장기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 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을 출범(10.1일)하였다.
[23] 2024년말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22.9%)은 OECD 통계 대상 33개국 평균(16.6%)를 상회하였다.

2. 자산시장

6.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었다. 국고채 금리는 2024년 이후 경기둔화 우려 지속, 4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큰 폭 낮아졌다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상승 전환한 이후 연말 북클로징에 따른 기관투자자 매수세 약화 등도 가세하며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금년 들어서도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일본의 확장재정 기조 우려 부각, 채권 발행 물량 증대 및 머니무브에 따른 수급 부담 등으로 상승흐름을 보이다가, 2월 중순 이후에는 금리상승 과도 인식, 점도표 도입 등 포워드 가이던스 개선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3월 들어서는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재차 상승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24] 등은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19]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부터 국고채 금리 상승폭 확대, 은행채 발행 증가 등으로 확대 전환된 후,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을 보이며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20]

[그림 19] 국고채 금리 및 금리변동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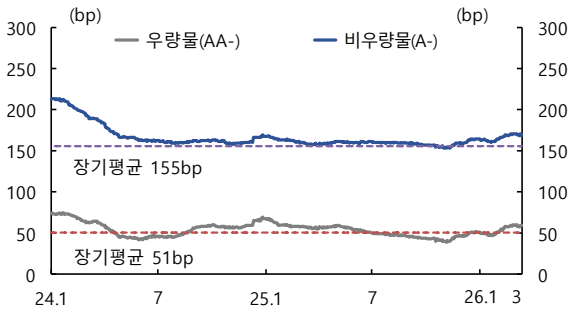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는 최근 큰 폭 상승



주: 1) 국고채 3년물, 지수가중이동평균(EWMA)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그림 20] 회사채 신용스프레드[1)2)]

신용스프레드는 장기평균을 소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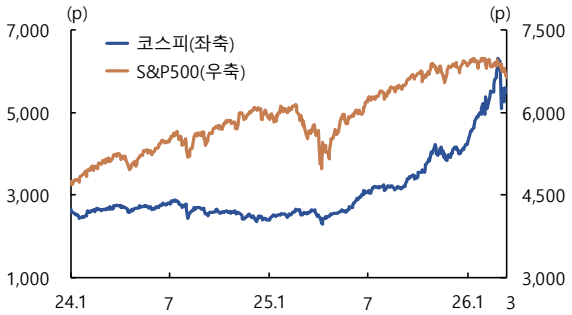


주: 1) 국고채 3년 금리 대비 2) 장기평균은 13.1월~26.3.13일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7.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큰 폭 상승하였다가 중동상황 이후 변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 및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 등으로 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금년에도 국내 주가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확대되는 가운데 방산 · 원전 · 금융 등 여타 업종이 동반 상승하며 사상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였으나, 중동상황 발생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25][그림21,22]

[그림 21] 코스피 및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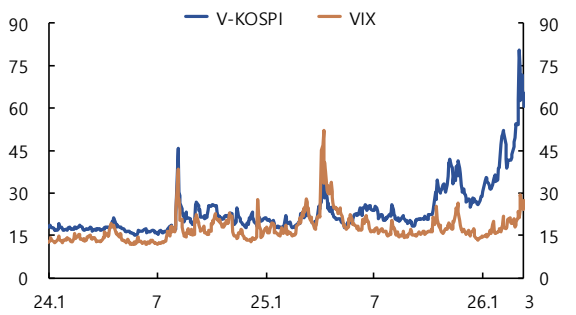
코스피는 가파르게 상승한 후 중동상황 발생으로 큰 폭 조정



자료: 코스콤, Bloomberg

[그림 22] 변동성 지수

주가변동성지수는 중동상황 이후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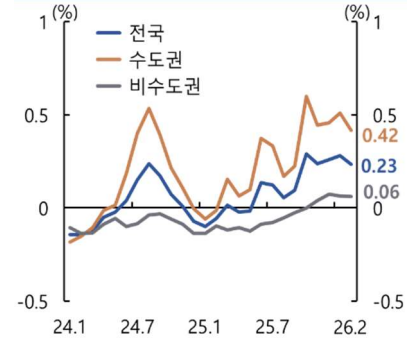
자료: 코스콤, Bloomberg

[24] 한국은행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지표물 및 선물바스켓물을 중심으로 3월 10일 국고채 단순매입(3조원)을 실시하였다.
[25] 금년 3월 들어 중동상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제유가 상승 등을 계기로 주가변동성지수(V-KOSPI)가 급등하여 역대 최고치(80.37, 3.4일)를 기록하였다.

8.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비수도권은 지난해 10월 상승 전환한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그림23]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가격이 최근 다주택자 관련 규제 강화 방침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26]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대 또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금년 2월 들어 약화[27]되었다.[그림24] 주택매매거래량은 10.15대책 이후 축소되었다가 차입제약이 적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28]되는 모습이다.[그림25] 한편, 미분양(6.7만호, 26.1월말 기준) 및 준공후 미분양(3.0만호)은 장기평균(10.1월~26.1월 평균, 각각 5.7만호, 1.9만호)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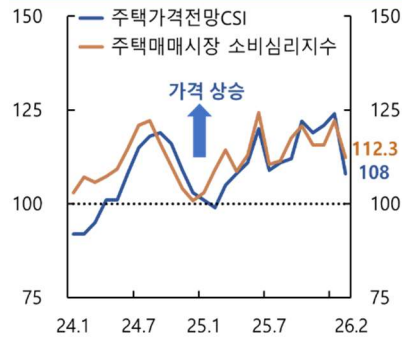
[그림 23]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

수도권 상승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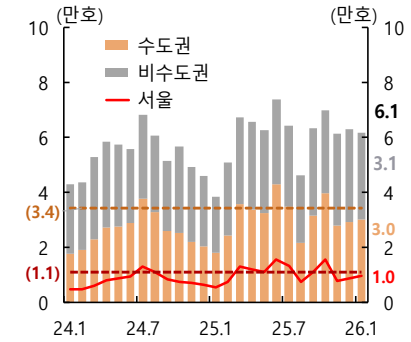
[그림 24] 주택가격전망CSI[2] 및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3]

주택가격 상승기대 약화



[그림 25] 주택매매거래량[4]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이후 일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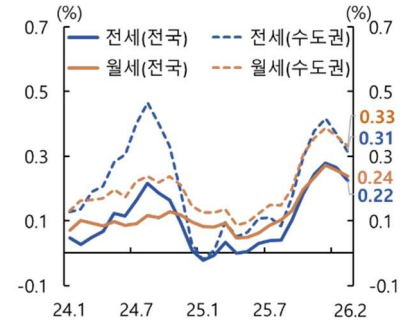


주: 1) 전월대비 2) 100을 초과할수록 1년 후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
3) 100을 초과할수록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 4) 신고일 기준, 점선은 10.1월~26.1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9. 임대차 시장의 경우 전월세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26] 전월세거래량은 1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6.8%까지 상승하였다.[그림27]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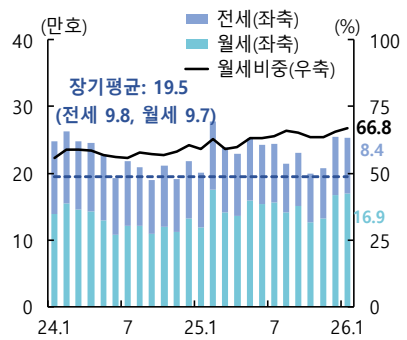
[그림 26]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1]

수도권 중심 높은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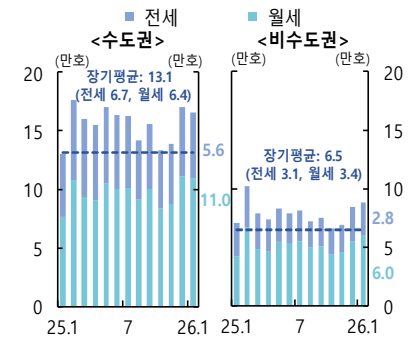
[그림 27] 주택전월세거래량[2)3)]

지난해 12월 이후 큰 폭 증가



[그림 28] 지역별 전월세거래량[2)3)]

모든 지역에서 월세 중심으로 증가



주: 1) 전월대비 2) 점선은 17년 1월~26년 1월 평균
3) 2021년 6월 이후 집계범위가 확정일자 신고자료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자료로 확대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6] 주간 아파트매매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의 상승률이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1월 4주 0.17% → 2월 2주 0.14% → 4주 0.09% → 3월 3주 0.05%).
[27] 서울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에도 금년 1월 130으로 2019년 12월(130)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월에는 113으로 하락하였다.
[28] 2026년 1월에는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거래량이 최근 5년 평균(21~25년) 1월 거래량대비 각각 38.1%, 60.9% 증가하였다.

10. 기타 자산시장에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감소하였고, 가격 변동성은 지난해말 축소되었다가 최근 가상자산 가격 급락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10월 선물시장 대규모 포지션 청산[29] 이후 위험회피성향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자금 유출[30]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상원 통과[31]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연준 의장 지명 직후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그림29]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 등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그림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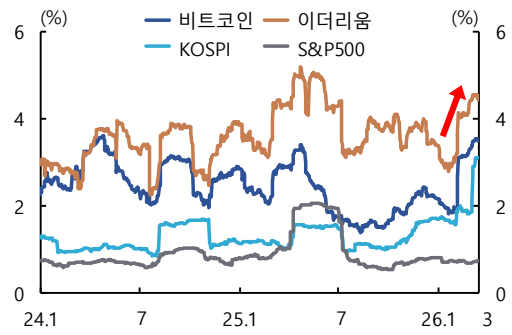
[그림 29]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2025년 10월 이후 감소세 지속

자료: CoinGecko

[그림 30] 글로벌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1)]

금년초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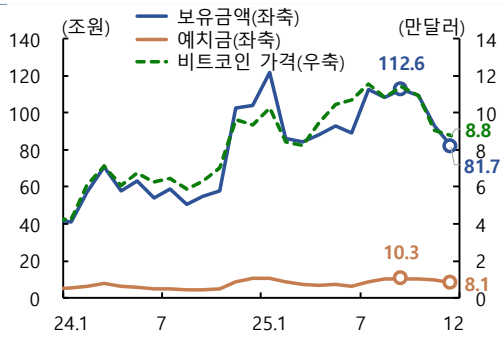


주: 1) 일별 수익률의 60일 이동 표준편차를 통해 산출
자료: 한국은행, CoinGecko, Bloomberg

11.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금액과 거래대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5년 12월말 가상자산 보유금액(고객 보유 기준)은 81.7조원, 예치금은 8.1조원으로 9월말(각각 112.6조원, 10.3조원)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31] 가상자산 거래대금(일평균)도 2025년 3/4분기 6.4조원에서 4/4분기 4.4조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스테이블코인은 같은 기간중 0.44조원에서 0.57조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32][그림32]

[그림 31]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금액[1)] 및 예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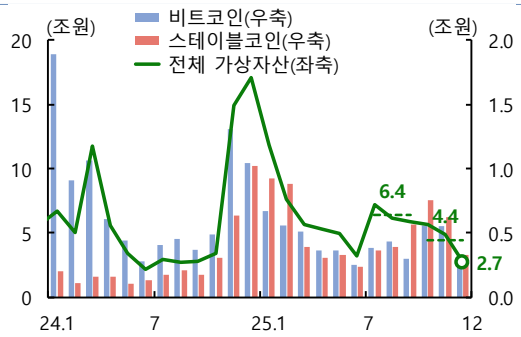
2025년 4/4분기중 큰 폭 감소



주: 1) 고객 보유금액 기준, 거래소 보유금액 제외
자료: 한국은행, CoinmarketCap,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

[그림 32]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일평균)

2025년 4/4분기중 큰 폭 감소



자료: 한국은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

29 2025년 10월 10일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100%) 부과 가능성 언급 등으로 가상자산 선물시장에서 역사상 최대규모(191억달러)의 포지션 청산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1월 30일~2월 6일중에도 98억달러의 포지션 청산이 있었다.

30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규모(백만달러): 2025년 10월 +3,448 → 11월 -3,374 → 12월 -862 → 2026년 1월 -1,615

31 미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자의 보상(reward) 및 인센티브 지급 허용 이슈 등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2026년 3월 16일 기준).

32 한편, 금년 2월 6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부 고객이 받은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회복하였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BOX 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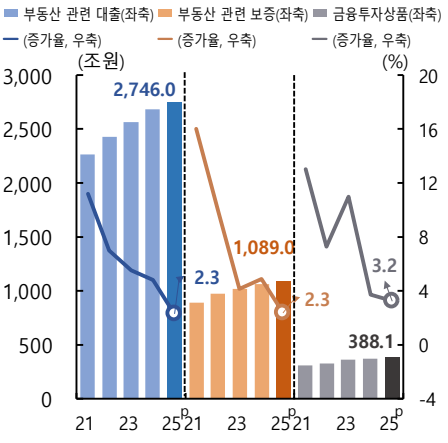
2025년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잠정)[33]의 잔액은 부동산 관련 대출 2,746.0조원, 부동산 관련 보증 1,089.0조원, 금융투자상품 388.1조원으로 추산되었다. 부문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각각 2.3%, 2.3% 및 3.2%로 2024년말(4.8%, 4.8% 및 3.7%)대비 모두 하락하였다.

각 부문별 변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가계 부동산 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24년 3.6% → 25년 2.8%, 전년동기대비)되었으며, 일반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비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24년말보다는 하락(11.3% → 5.3%)하였다. 한편,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은 지방 중심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 전환(1.8% → -0.1%)하였고, 부동산 PF대출도 PF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11.8% → -13.8%)되었다. **부동산 관련 보증**은 가계보증이 주택구입자금 보증 확대 등으로 증가세(6.9% → 3.8%)를 이어갔으나 사업자보증은 감소로 전환(0.5% → -2.3%)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은 정책모기지 공급조정 등으로 인한 MBS 감소세 확대(-2.3% → -11.3%) 등으로 둔화되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의 명목GDP대비 비율도 2023년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말 기준 각 부문의 비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103.1%(-1.9%p), 보증은 40.9%(-0.7%p), 금융투자상품은 14.6%(-0.1%p)로 모든 부문에서 2024년말보다 하락하였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그간의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과 함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노력, 부동산PF 구조조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34]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BOX 2-1]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규모[1] 및 증가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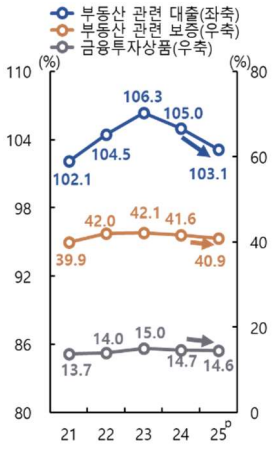


[BOX 2-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부문별 세부 구성

(조원, %)

구성	2025 년	
	규모 [1]	증가율 [2]
부동산 관련 대출	**2,746.0**	**(2.3)**
(가계 부동산 대출)	1,347.6	(2.8)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731.4	(5.3)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	622.7	(-0.1)
(부동산 PF 대출 [4])	161.5	(-13.8)
부동산 관련 보증	**1,089.0**	**(2.3)**
(가계보증)	542.2	(3.8)
(사업자보증)	365.3	(-2.3)
금융투자상품	**388.1**	**(3.2)**
(MBS)	144.5	(-11.3)

[BOX 2-3] GDP[3]대비 비율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당분기 및 이전 3분기 합계 기준
4) 25.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

---

[33]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란 국내 부동산 부문의 충격이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자 등 경제주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규모를 의미하며, ①금융기관을 통한 부동산 관련 대출(가계 부동산 대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건설업종의 기업대출, 부동산PF 대출), ②부동산 관련 보증, 그리고 ③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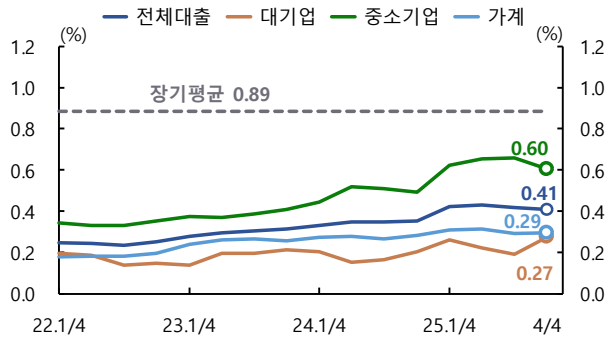
[34]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민간 614조원, 정책금융 6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금융위, 1.21일).

3. 금융기관

12. 은행[35]의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5년 4/4분기말 0.41%로 높은 모습이나 장기평균(10~25년 0.89%) 대비 상당폭 낮은 수준[36]을 보였다[37].[그림33] 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소매업은 상승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2/4분기 말대비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황이다.[그림34]

[그림 33]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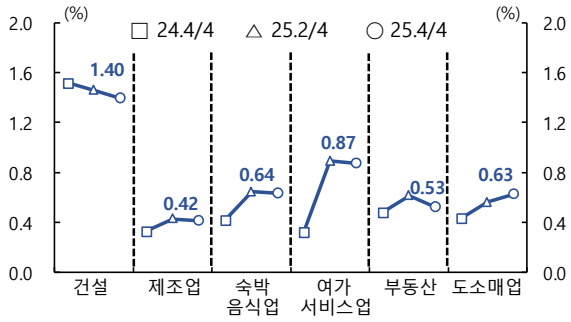
장기평균 대비 상당폭 낮은 수준 유지



주: 1) 기말 기준
2)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 ~ 2025년 3/4분기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34] 일반은행 주요 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1)]

건설업이 높은 가운데 여타 업종에서 상승세가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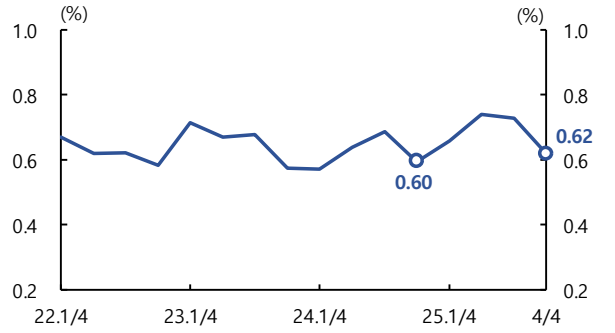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3. 은행의 수익성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은 2025년 4/4분기 0.62%로 전년동기(0.6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35] 이자이익 규모는 소폭 확대되었으나 이자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과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축소[38]되었다.[그림36]

[그림 35] 일반은행 총자산순이익률[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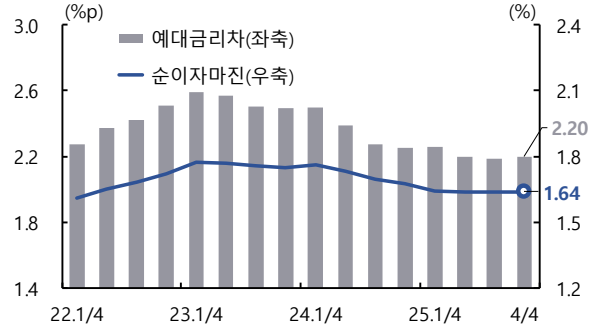
전년동기(0.6%)와 비슷한 수준



주: 1) 대손준비금 전입전, 기간중
2) 누적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36] 일반은행 순이자마진[1)] 및 예대금리차[2)]

순이자마진 및 예대금리차(잔액 기준)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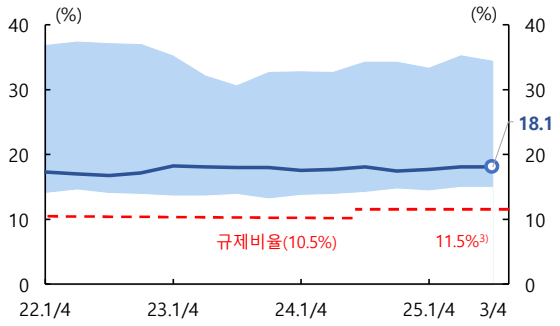
주: 1) (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 / 이자수익자산 규모(평균)
2) 예금은행 잔액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35 일반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6 다만,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분기(0.92%)대비 0.10%p 상승한 1.02%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자세한 내용은 <BOX 3>「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현황」 참조
37 연체율은 2022년 이후 상승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026년 1월말 0.49%로 전년동기(0.45%)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장기평균(0.56%)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
38 예대금리차(예금은행 기준, 잔액 기준)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축소(24년 4/4분기 2.25%p → 25년 4/4분기 2.20%p)되었고, 순이자마진(일반은행 기준 1.67% → 1.64%)도 이자수익자산이 이자이익에 비해 상당폭 증가하면서 축소되었다.

14.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2025년 3/4분기말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8.1%로 견조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되면서 전분기(18.2%) 수준을 유지하였다(규제비율 11.5%, D-SIBs[39] 12.5%).[그림37]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25년 4/4분기말 156.6%)은 대손충당금은 줄어든 반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이 확대됨에 따라 전분기말(157.8%)대비 소폭(1.2%p) 하락하였다.[그림38]

[그림 37] 일반은행 BIS기준 총자본비율[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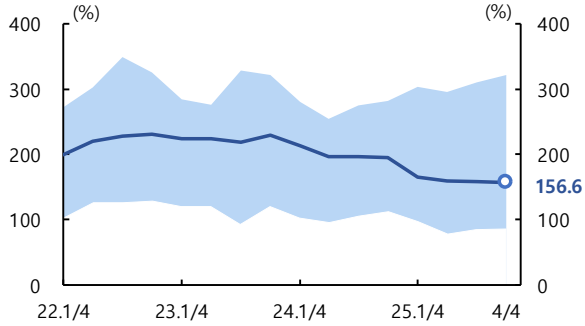
전분기(18.2%) 수준 유지



주: 1) 기말 기준
2) 음영은 일반은행 분포
3) 2024년 5월 이후 경기대응완충자본(1%)이 규제비율에 추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38] 일반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비율[1)2)3)]

전분기(157.8%)대비 소폭 낮아지면서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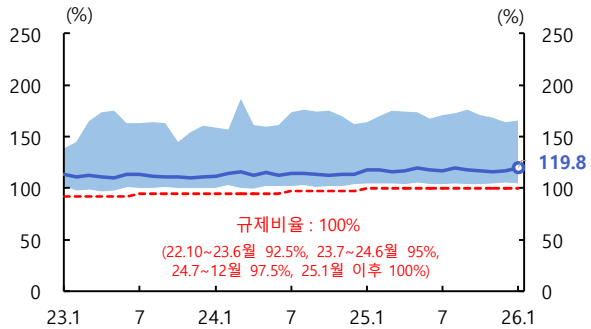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2) 기말 기준
3) 음영은 토스뱅크(21년 10월 출범) 제외 분포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5. 은행의 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6년 1월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19.8%로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있으며,[그림39] 외화 LCR[40]도 고유동성자산이 확대되면서 2025년 9월(160.4%)보다 상승한 166.8%를 기록하였다(규제비율 80%).[그림40]

[그림 39] 일반은행 통합[1)2)]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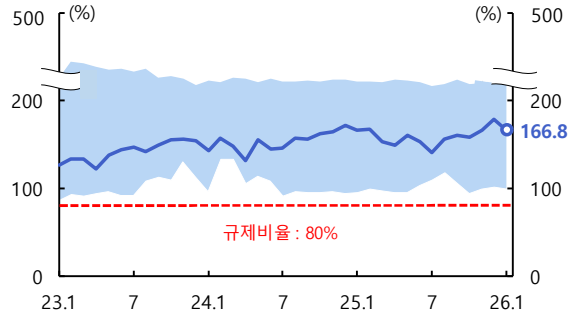
규제비율(100%)을 상회



주: 1) 월 평잔 기준
2)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일반은행 분포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0] 일반은행 외화[1)2)]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025년 9월보다 상승



주: 1) 월 평잔 기준
2) 광주·제주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은 외화부채 비중이 낮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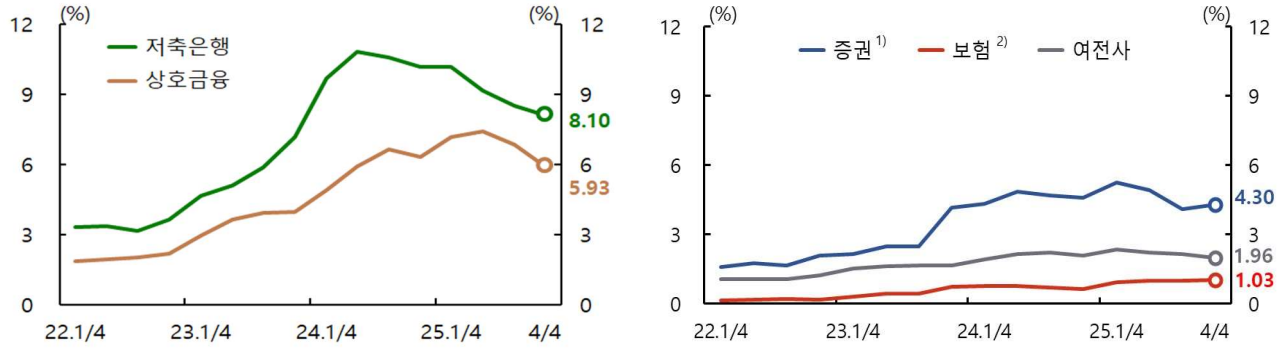
[39] 2026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는 신한은행(신한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국민은행(KB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및 농협은행(농협지주)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40] 외화 LCR은 바젤Ⅲ 기준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실물 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되었다.

16. 비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업권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저축은행(25년 3/4분기말 8.49% → 4/4분기말 8.10%), 상호금융(6.86% → 5.93%), 여신전문금융회사(2.15% → 1.96%) 등 다수 업권에서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부실채권 매·상각이 확대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하락[41]하였다. 반면 증권회사(4.10% → 4.30%)와 보험회사(0.98% → 1.03%)의 경우 일부 PF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전분기대비 상승하였다.[그림41]

[그림 41] 비은행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체로 하락하였으나 증권·보험회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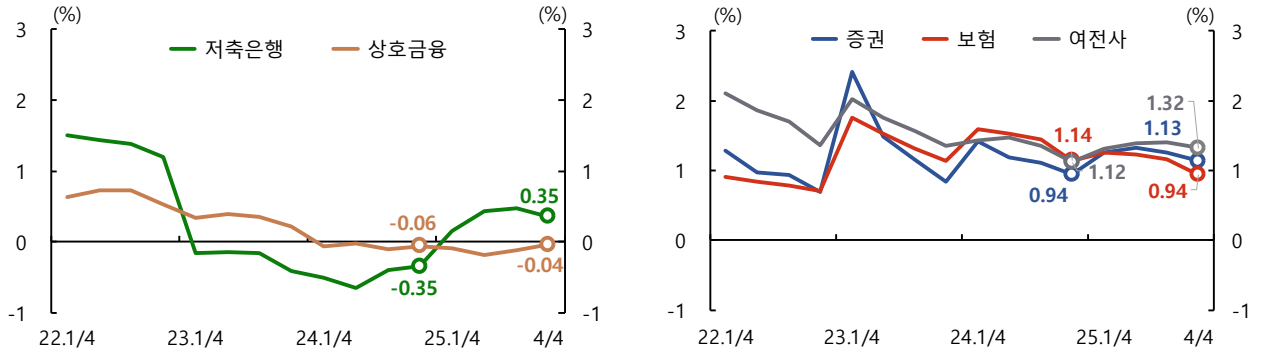


주: 1) 미수금 제외 기준 2) 보험회사는 보험약관대출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7. 비은행의 수익성은 보험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권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 감소 등에 힘입어 총자산순이익률(전년동기대비)이 상승 전환되었으며 상호금융도 하락세가 축소되었다. 증권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한 반면, 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 증가 등에 따른 보험손익 저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투자 관련 손실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전년동기대비 약화되었다. 한편 여전사는 대손상각비 등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그림42]

[그림 42] 비은행 업권별 총자산순이익률[1)]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저축은행·증권회사 등 대부분 업권에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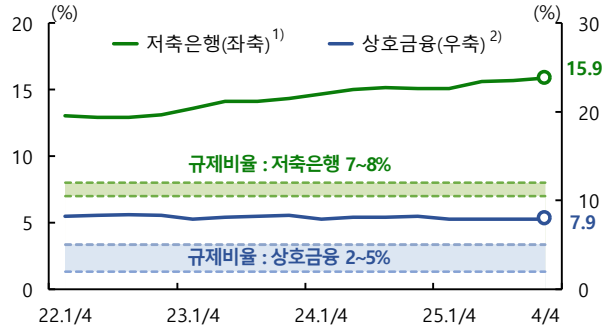
주: 1) 누적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41 다만, 과거 장기평균(15년~25년중 저축은행 6.66%, 상호금융 2.87%, 여전사 1.64%)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8. 비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자본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본비율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감독기준을 상회하였다.[그림43] 여전사도 카드사와 캐피탈사 모두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였고,[그림44] 증권회사는 연말 배당지급, 종합투자계좌(IMA)[42] 영업개시, 일부 회사의 PF익스포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투사의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다.[그림45] 보험회사는 장기금리 상승[43]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44]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본비율[45]이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46]

[그림 4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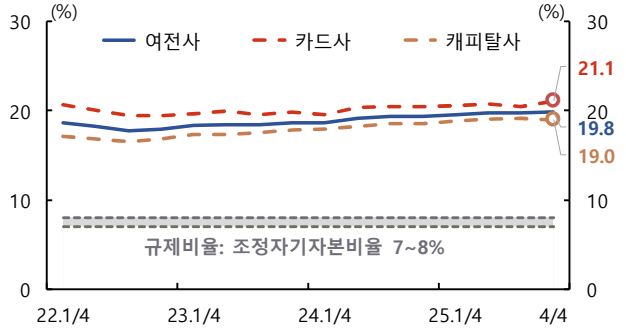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전분기의 높은 수준 유지



주: 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 (자산 1조원 이상은 8%)
2) 순자본비율,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4]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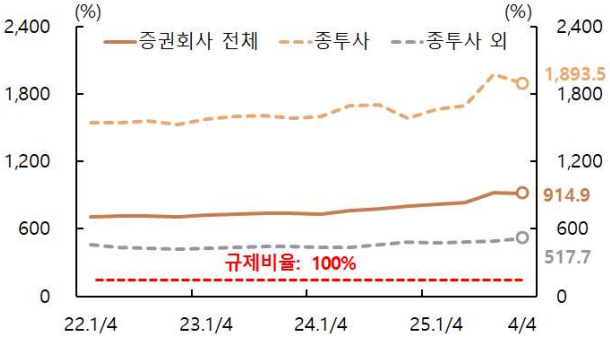
카드사와 캐피탈사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 상회



주: 1)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8%(캐피탈사 7%, 신용카드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5] 증권회사 순자본비율(NC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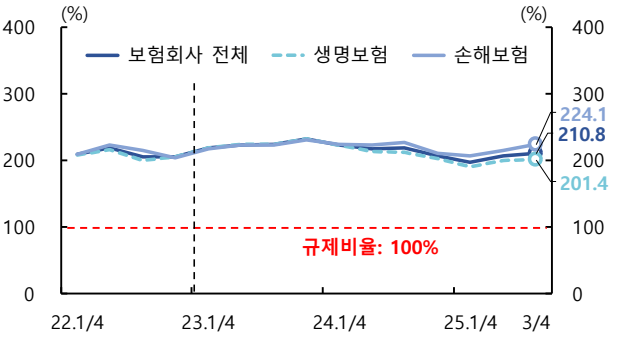
전분기대비 하락



주: 1)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6]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1)2)

전분기대비 상승



주: 1) 가용자본/요구자본, 2022년 4/4분기 이전은 RBC, 2023년 1/4분기 이후부터는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2)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42]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는 증권회사(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구조의 계좌로서 고객예탁금에 사전 약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예치형 상품인 자산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 CMA)와 구분된다.

[43] 2025년 9월말 기준 장기 국고채금리는 10년물 2.94%, 20년물 2.90%로 2025년 6월말(2.81%, 2.84%)대비 각각 13bp, 6b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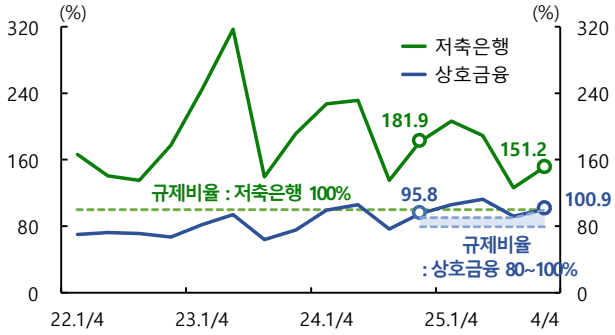
[44]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긴 상황으로 시장금리 상승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액이 자산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상승한다.

[45]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자본적정성 관련 공시기한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종료 후 3개월(연결산의 경우 4개월)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는 2025년 3/4분기말 기준이다.

19. 비은행의 유동성비율은 업권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전년동기대비)은 현금 및 예치금 등 유동성자산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46]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그림47] 여전사도 규제 정상화[47] 등으로 카드사를 중심으로 유동성자산을 늘리면서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다.[그림48] 증권회사는 투자자 예탁금 유입, 단기차입부채[48]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부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그림49], 보험회사[49]는 장기 투자자산 비중의 확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다.[그림50]

[그림 47]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비율[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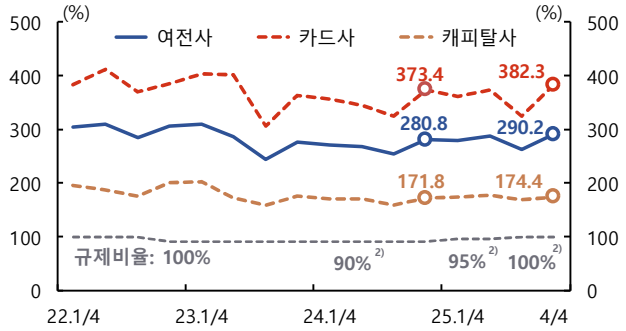
저축은행은 전년동기대비 하락, 상호금융은 상당폭 상승



주: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
2) 상호금융은 규제비율(100%, 자산 300억원 미만은 80%, 자산 300~1,000억원 미만은 90%)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8]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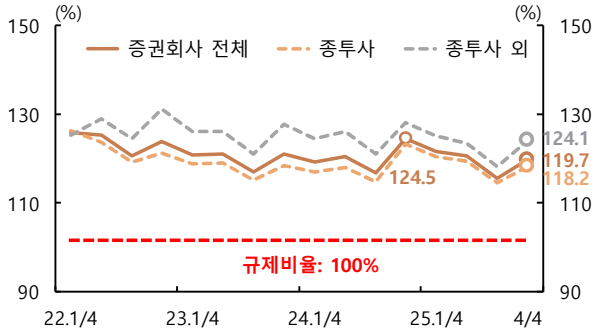
규제 정상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상승



주: 1)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 2022.12월~2024.12월중 90%, 2025.1~6월중 95%, 7월부터 100%를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49] 증권회사 유동성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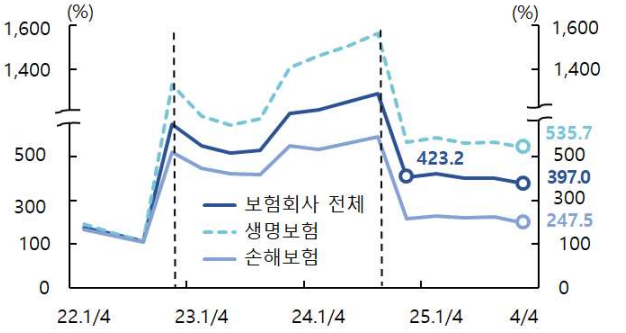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



주: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50] 보험회사 유동성비율[1)]

전년동기대비 하락



주: 1) 유동성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46 상호금융은 2024년 12월 29일(새마을금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유동성비율 규제(90% 이상, 자산 300억원 미만은 80% 이상)가 시행되었다. 단,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금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규제비율이 100%로 강화되었다.

47 2022년 12월~2024년 12월중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유동성비율 규제(90% 이상)가 2025년 1~6월중 95%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100%로 정상화되었다.

48 2025년말 기준 투자자 예수금은 136.5조원으로 전년(88.6조원)대비 54.1% 증가하였다. 한편 증권회사의 차입부채는 559.9조원으로 전년(467.3조원)대비 19.8%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RP매도(+17.6조원), 차입금(+14.9조원) 등 주로 단기 차입부채의 증가폭이 컸다. 자세한 내용은 <BOX 4>「증권회사로의 자금 유입 동향」참조

49 보험회사 유동성비율의 경우 보험회사 유동성상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산출기준이 변경되었다. 2024년 12월의 경우 유동성자산 인정범위가 축소(만기 3개월이상 채권 인정비중 100% →30%)되면서 유동성비율이 상당폭 하락하였다.

<BOX 3>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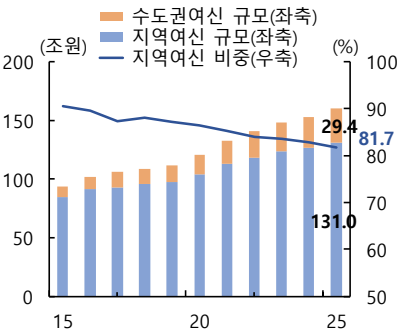
지방은행은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을 거점[50]으로 하여 지역금융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건전성도 저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여신 현황을 보면, 지역[51]여신 비중이 2025년말 81.7%로 높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다.[52] 지역여신 성장세가 부진한 가운데 수도권 여신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이후 증가율 격차가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대출 종류별 지역여신 비중은 가계대출이 77.0%, 기업대출은 83.9%로 가계에 비해 기업에 대한 지역 신용공급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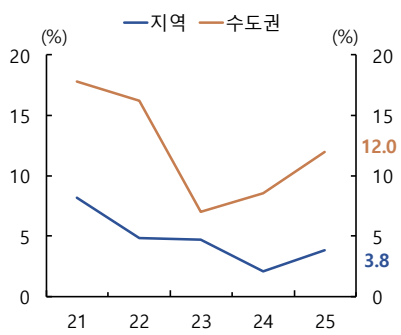
지역수신 비중은 2025년말 68.7%로, 수도권 등 역외로부터의 수신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역수신 비중이 낮은 것은 시중은행 등 여타 예금취급기관과의 지역내 수신경쟁 등으로 인해 지방은행이 수도권 등에서 수신영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여신의 지역수신 대비 비율은 2025년말 116.0%로 지역여신이 지역수신 규모를 상회하는데, 이는 지방은행이 수도권 등 역외에서 조달한 수신자금의 일부를 지역여신으로 환류시키는 영업구조에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은행 건전성이 지난해 이후 약화되고 있어 앞으로 신용위험 관리 부담이 여신 취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역 부동산 및 실물경기 부진의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2025년말 기준 1.02%를 기록한 데 반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고정이하여신 증가 등으로 2025년말에는 99.8%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방은행이 금년중 리스크 관리를 주요 경영계획 목표로 설정하여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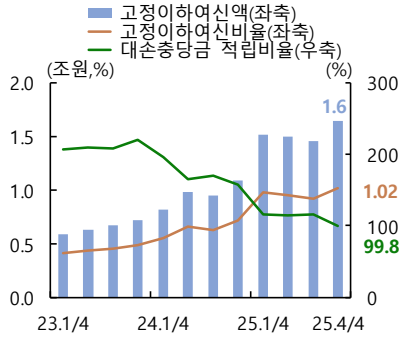
[BOX 3-1] 지방은행[1]의 지역여신[2] 현황



[BOX 3-2] 지방은행[1] 권역별[2] 여신 증가율[3]



[BOX 3-3] 지방은행[1] 고정이하여신 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4]



주: 1) 5개 은행 기준(iM뱅크 제외) 2) 점포 소재지 기준 3) 전년말대비 4)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50] 은행법은 지방은행을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시·도)을 주된 거점 영업구역으로 하고, 수도권에서도 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51] 지방은행 각 점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및 수도권 대출로 분류하였다.

[52] 한편, 2025년말 은행권의 지역여신 점유율을 보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각각 46.4% 및 38.4%에 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15.2%에 그치고 있다.

[53] 업종별로 보면 지역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2020년말 25.7%에서 2025년말 27.6%로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지역 제조업은 31.3%에서 26.7%로 하락하는 등 제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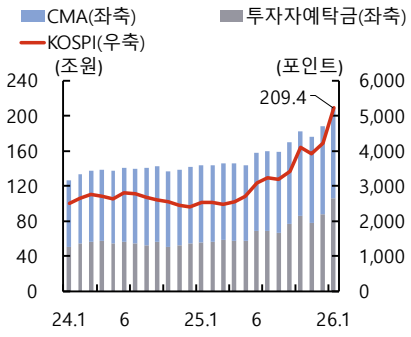
<BOX 4> 증권회사로의 자금 유입 동향

최근 증권회사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① 국내외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식거래 관련 자금이 늘어난 점, ② 증권회사가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금융·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조달 기반 확충 수요가 커진 점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거래 관련 자금 유입은 주가지수 상승과 함께 증권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CMA 등 대기성 자금 잔액이 크게 늘어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월말 기준 대기성 자금 규모는 209.4조원으로 주식시장 상승세가 본격화된 2025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ETF 시장의 확대와 증권사 개인종합관리계좌(ISA)[54]의 성장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증권회사는 종투사 등 대형사[55]를 중심으로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해 조달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은행 예금금리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 발행어음 잔액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 잔액도 원금이 보장되는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형(ELB)·기타연계형(DLB))를 중심으로 확대(24년말 81.9조원 → 25년말 95.5조원)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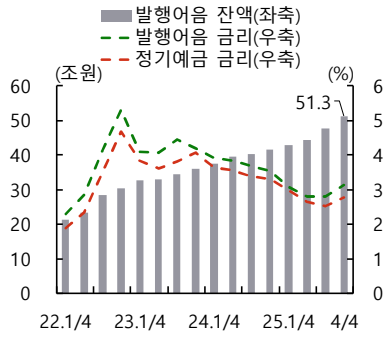
이러한 증권회사로의 자금 유입 확대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지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시장으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쏠림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증권회사가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단기시장성 차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시 증권회사의 유동성 리스크[56]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30조원[57]을 상회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활용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위험추구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58]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이와 관련된 운용손익 및 신용리스크 관리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될 것이다.[59]

[BOX 4-1] 주가지수 및 대기성 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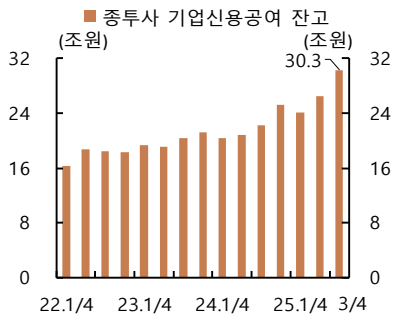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OX 4-2] 발행어음 잔액 및 금리[1] 추이



주: 1) 12개월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BOX 4-3] 종투사 기업신용공여[1] 추이



주: 1) 기업대출, 어음 할인·매입 등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54] ISA 계좌 투자금액(24.1/4분기 → 25.4/4분기): (은행) 13.7조원 → 16.2조원, (증권회사) 12.3조원 → 32.1조원

[55]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회사(종투사)가 운용할 수 있으며 파생결합증권 발행도 자체 신용도와 조달·헤지 역량 측면에서 대형사가 소형사보다 유리하다.

[56] 증권회사는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단기시장성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으로 파생거래 관련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와 대기성 자금이탈 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단기유동성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2>「주요 취약요인을 고려한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참조

[57] 증권회사 신용융자 잔액은 2025년말 27.3조원에서 2026년 2월말 32.7조원까지 증가하였다. 다만 일부 증권회사는 신용융자 한도(자기자본 100% 이내)에 근접함에 따라 추가적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58] 발행어음·IMA 조달금액대비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율: 2026년 10% → 2027년 20% → 2028년 25%

[59] 최근 미국에서 사모신용 시장 부실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뿐 아니라 발행어음·IMA 운용 등으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대형 증권회사의 경우 해외 사모대출 펀드 등 대체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대외부문

20.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다가 중동상황 발생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말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60] 영향 등으로 1,439.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금년 들어 미 달러화 및 엔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아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였으나, 중동상황 발생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다.[그림51] 한편 환율 변동성은 지난해 하반기중 축소되었다가 금년 들어 다시 확대되었다.[그림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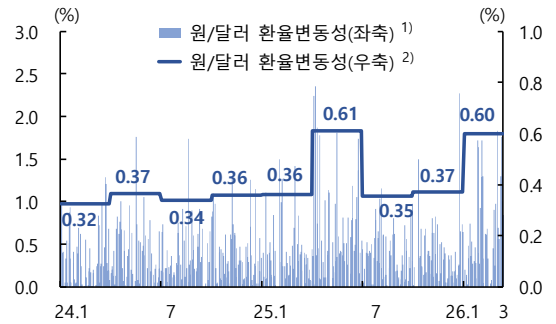
[그림 51] 원/달러 환율 및 미 달러화지수

원/달러 환율은 등락 후 상승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52] 원/달러 환율 변동성

금년 들어 환율 변동성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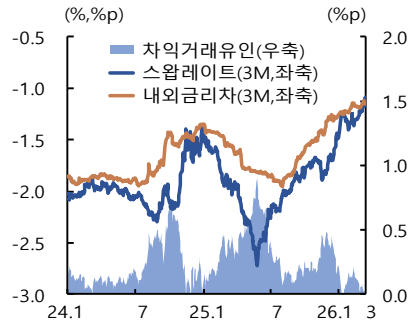


주: 1) 15:30분 종가기준 전일대비 변동률(절댓값) 2) 분기평균
자료: 한국은행

21. 외화자금시장은 양호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속되었다. 차익거래유인은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수요 등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확대되었으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2025년 12월)에 따른 외환스왑시장 수급여건 개선, 역외 NDF 순매입 등으로 축소되었다.[그림53]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다. 2025년 하반기중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차입 단기 가산금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장기 가산금리는 만기 장기화 영향 등으로 9월중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였다.[그림54] 일반은행 CDS 프리미엄은 미 정부 셧다운 리스크 및 미·중 갈등 재고조 우려 등에 의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지난해 9월말 상승한 이후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하였으나, 금년 3월 들어 중동상황 발생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하였다.[그림55]

[그림 53] 차익거래유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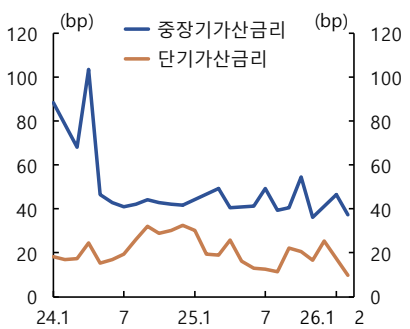
차익거래유인은 축소



주: 1) 내외금리차-스왑레이트
자료: 한국자금중개, 금융투자협회

[그림 54]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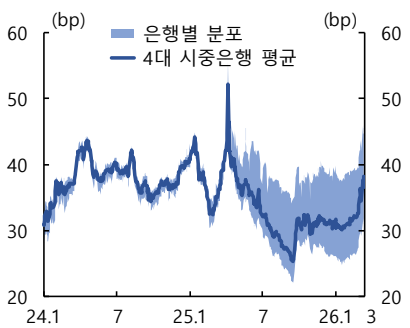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



주: 1) SOF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익일물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그림 55] 일반은행[1)] CDS 프리미엄[2)]

안정세를 보이다 금년 3월 들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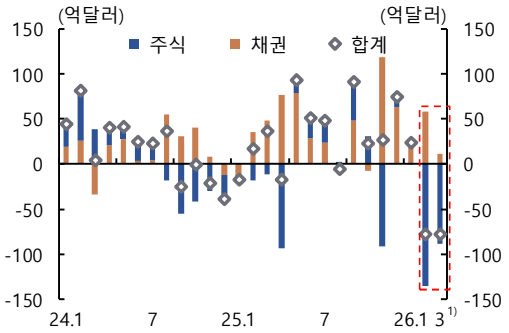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60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2025년 12월) 등이 발표되었다.

22. 금년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월중 순유입이 이어졌으나 2월 이후에는 6개월만에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주식자금(1.1~3.9일중 -224.5억달러)은 국내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 등에 따라 1월중 소폭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2월 이후에는 글로벌 AI 투자 관련 우려 및 중동상황 발생이 가세하면서 순유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채권자금(1.1~3.9일중 +93.1억달러)의 경우 글로벌 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와 그간 시장금리 오름세에 따른 저가매수에 힘입어 순유입 흐름이 지속되었다.[그림56, 57]

[그림 56]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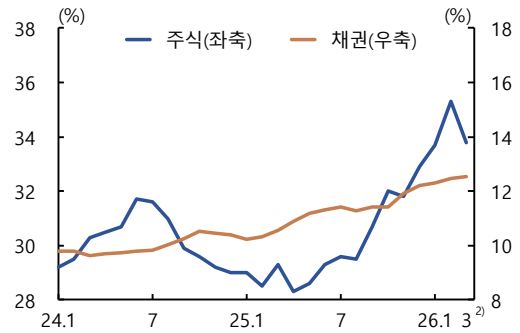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금년 2월 이후 순유출 전환



주: 1) 3월 1일 ~ 3월 9일(결제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57] 외국인 국내증권 보유 비중1)

지난해 이후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보유비중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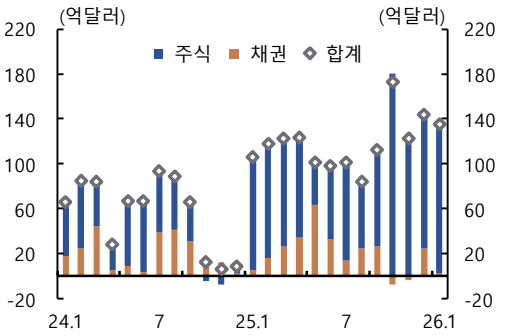


주: 1) 주식은 KOSPI · KOSDAQ 시가총액 합계, 채권은 상장잔액 대비
2) 3월 9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23. 2025년중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자금은 전년에 비해 순투자 흐름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금년 1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2025년중 거주자의 해외증권 순투자(1,402.8억달러)는 전년(669.7억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금년 1월(134.6억달러)에도 증가하였다. 주식자금(25년중 1,143.5억달러)은 미국 주가 高밸류에이션 등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차익실현 등으로 지난해 5~6월중 일시적으로 순투자가 둔화되었으나 9월 이후 주가 조정시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면서 연간 전체로는 2024년(421.6억달러)보다 큰 폭의 순투자를 기록하였다. 채권자금(25년중 259.3억달러)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지속 기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248.2억달러)에 이어 순투자 흐름이 이어졌다.[그림58, 59]

[그림 58] 거주자 해외증권투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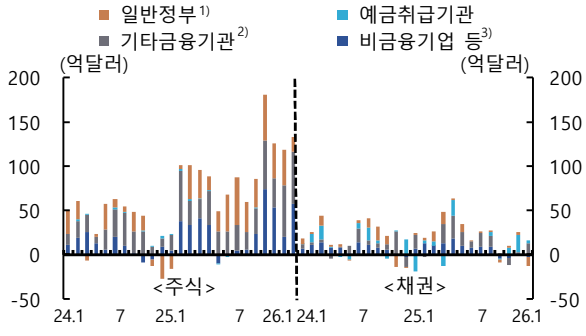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전년에 비해 순투자 흐름이 크게 확대



주: 1) Korean Paper 제외
자료: 한국은행

[그림 59] 주체별 해외증권투자

일반정부1), 기타금융기관2) 및 비금융기업등3)을 중심으로 순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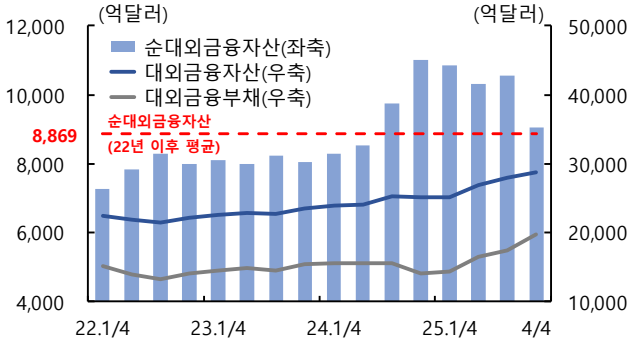


주: 1) 국민연금, KIC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3) 개인투자자 등
자료: 한국은행

24.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2025년말 대외금융자산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주가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주식투자 평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외금융부채의 증가폭이 대외금융자산의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은 2025년 3/4분기말대비 감소하였다.[그림60] 한편, 대외채무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채무 중 장기외채(+114억달러)는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잔액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174억달러)는 예금취급기관의 대외차입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외채/대외채무 비중은 상승(25년 3/4분기말 21.9% → 25년 4/4분기말 23.3%)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22년 이후 23.7%)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외환보유액보다 단기외채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25년 3/4분기말 38.3% → 25년 4/4분기말 41.8%)하였다.[그림61, 62, 63]

[그림 60] 순대외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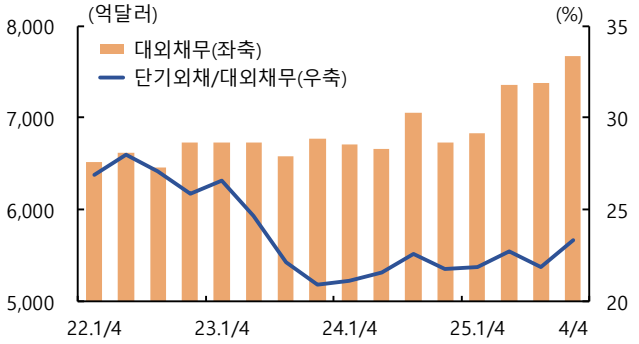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대비 감소



자료: 한국은행

[그림 61] 대외채무 및 단기외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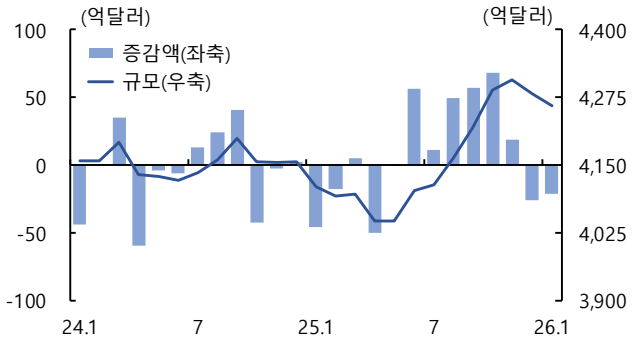
단기외채/대외채무 비중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



자료: 한국은행

[그림 62] 외환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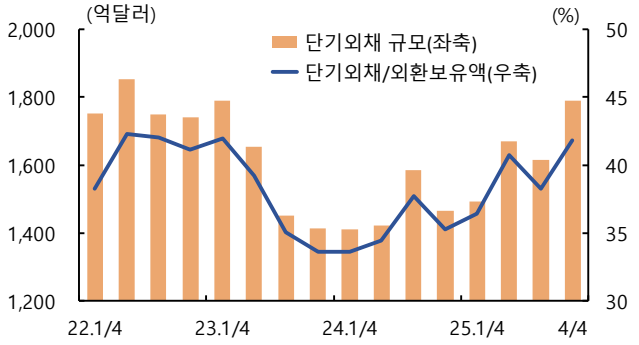
외환보유액은 2025년 11월 이후 소폭 감소



자료: 한국은행

[그림 63]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전분기대비 상승



자료: 한국은행

5. 금융제도 및 정책

25. 정부는 2026년 1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중금리 대출의 양적·질적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금융 등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출발기금 제도 등을 개선하여 연체자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안전망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동 정책은 취약차주 이자부담 경감,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채무 성실상환자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6.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담보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벤처·신산업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모험자본 시장에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국민도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성장집합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공모형 펀드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조합 등의 지분·채무증권에 투자하거나 금전 대여하여 기업의 전 성장 단계에 걸친 자금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동 제도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장기 위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며 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대출 중심 금융구조의 집중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7. 이외에도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코스닥 시장과 저축은행 제도를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 요건을 정비해 부실기업의 시장 내 장기 존속을 방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성장기업 중심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표1], 저축은행은 지역·중소기업 금융 역할을 강화하도록 규모와 역량을 차등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대출 규제와 영업기반을 개선해[표2]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금이 부동산 가계대출에서 혁신기업으로 재배분되고 자본시장 신뢰성과 금융시스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부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또는 신설

	코스닥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조기상향	(26.7월) 200억원 (27.1월) 300억원	(26.7월) 300억원 (27.1월) 500억원
동전주 기준 추가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대상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시 실질심사	
공시위반요건 하향 조정	최근 1년 공시벌점(누적) 10점 중대·고의 위반	

자료: 금융위원회

[표 2] 저축은행 규제체계 개편

규모·역량을 차등적으로 고려한 영업행위 및 규제 합리화

규모	규제체계 개편
공통	'중견기업' 대출 활성화 유도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온투법 연계투자 허용 등
	예대율 산정시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 우대 : 수도권 100% → 105%, 비수도권 100% → 95%
대형사	유가증권 보유한도 합리화 : 주식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 등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허용 : BIS 비율 충족기관은 체크카드 등 허용
중·대형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차등화 : 법인 140억원(+20억원) 등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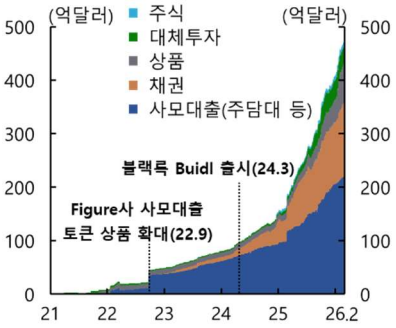
<BOX 5>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과제

최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실물 및 금융 자산에 대한 청구권 등을 디지털 형태로 생성·기록하는 토큰화(tokenization)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초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산 토큰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토큰증권의 활성화는 국내 자본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내외 토큰화 현황과 유용성 및 잠재리스크를 살펴보고 자산 토큰화 시장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점검하였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최근 성장세가 급격히 확대[61]되고 있다. 현재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26.2월말 479억 달러)는 기초자산 대비 작은 수준이나, 2030년경에는 2~4조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62] 대상자산별로는 미국(25년말 전체의 71.1%, 267억달러)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사모대출 토큰(26.2월말 전체의 46%)과 채권 기반 토큰(29%)[63]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상품(금·은 등)·대체투자·주식 토큰화 비중이 증가(24년말 10.6% → 26.2월말 24.8%)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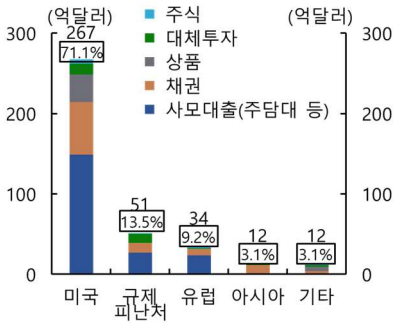
이에 비해,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은 부동산·음원저작권·미술품 등 비정형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누어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개별 업체 등의 공개 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국내 조각투자 누적 규모는 6,400억원 수준이다.[64] 국내에서는 그동안 조각투자상품이 규제 샌드박스와 「자본시장법」을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발행되었지만, 토큰증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미흡했고 다자간 거래 등 본격적인 유통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26.1.15일)[65]는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OX 5-1] 자산별 토큰화 규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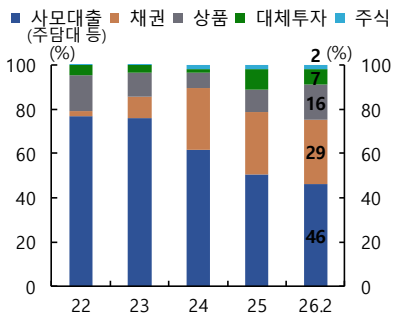
주: 1) RP 거래 제외
자료: RWA.xyz

[BOX 5-2] 국가별 토큰화 규모[1)] 및 비중



주: 1) 2025년말 기준
자료: RWA.xyz

[BOX 5-3] 자산별 토큰화 비중[1)]



주: 1) 기말 기준
자료: RWA.xyz

---

61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23년 64%, 2024년 88%, 2025년 169%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62 현재 국채 및 사모대출의 토큰화 비중은 각각 0.03%이나, 2030년 글로벌 토큰화 시장 규모는 도이치은행 1~2조달러, 맥킨지컨설팅 2~4조달러, 시티은행 4조달러, 보스턴컨설팅그룹 16조달러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63 미 국채에 투자하는 MMF 토큰은 국채의 단순한 현금흐름 구조 등으로 토큰화가 용이한 데다 높은 국채 수익률과 넓은 수요를 기반으로 블랙록(25년말 17.4억달러, 전체 채권 토큰의 15%) 등 대형 금융기관이 적극 출시하고 있다.

64 대상자산별로는 음원저작권이 65.2%(4,200억원, 뮤직카우)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술 17%(1,097억원, 아트앤가이드·테사·소투 등), 부동산 16%(1,027억원, 카사·루센트블록·펀들 등) 순이다. 다만, 현재 국내 조각투자는 업체별 자료공개 시점과 기준이 상이하여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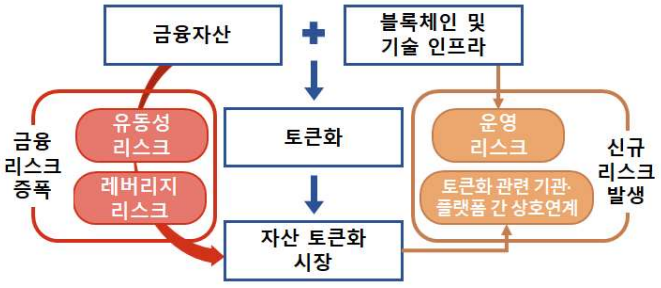
65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장부로 인정되었고 「자본시장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가 허용되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에 활용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규제체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산 토큰화는 자산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온체인 인프라에 구현하는 금융혁신을 통해 효율성·접근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유동성·레버리지·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도 수반한다. 토큰화는 분산원장 기술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기관의 개입 축소와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 자산과 대금의 동시 이전)를 통해 거래 기간 및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초자산 분할과 글로벌 24시간/7일 실시간 거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거래 기록의 실시간 공유·추적·감사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토큰화된 자산과 기초자산 간 유동성 또는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감독이 취약한 온체인상에서 토큰의 재담보화는 레버리지 누적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토큰화된 자산은 기술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시스템 장애나 해킹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발행·유통·보관을 수행하는 기관(또는 플랫폼)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될 수 있다.

[BOX 5-4] 자산 생애주기별 토큰화의 유용성

구분	전통 금융시스템	토큰화 적용
발행	수작업, 긴 준비기간, 고정된 발행 단위	스마트계약, 자동 발행, 분할 발행
유통	지역 및 시간 제약, 브로커 중개	글로벌 24시간/7일 거래
결제	T+2, 복잡한 대사 과정	T+0 즉시, 원자적 결제
보관	중앙 수탁계좌	분산원장, 전자지갑

[BOX 5-5] 자산 토큰화에 따른 잠재리스크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은 도입 초기인 만큼 유용성과 잠재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비정형적 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기반과 유동성을 확대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형적 자산의 가치 평가, 권리 보호, 수탁 및 공시 등 요건을 정비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합리적 가격 형성과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토큰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66]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자산별 토큰화 용이성[67]과 편익, 수요 기반, 온체인상에서의 담보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로드맵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국의 토큰화 관련 파일럿 테스트와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와 관련된 법적·기술적 세부 과제를 사전 점검하고 이를 기존 규제체계 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큰화된 자산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는 화폐 단일성 유지 등을 위해 중앙은행 화폐(디지털 화폐 포함) 또는 은행 예금(예금토큰 포함)을 활용하거나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66 부동산은 가치평가가 용이하고 자산분할을 통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음원저작권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K-POP 등의 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다면 국내 토큰화 시장의 차별성을 제고하고 해외 투자수요를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7 예컨대, 국채 또는 MMF는 정형화된 현금흐름 구조, 높은 담보 활용성, 소액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토큰화가 용이한 반면, 주식은 배당의 불확실성, 온체인에서 의결권·배당·증자 등의 구현 복잡성, 분산원장과 현행 법정 장부(주주명부 등) 간 정합성 문제 등으로 토큰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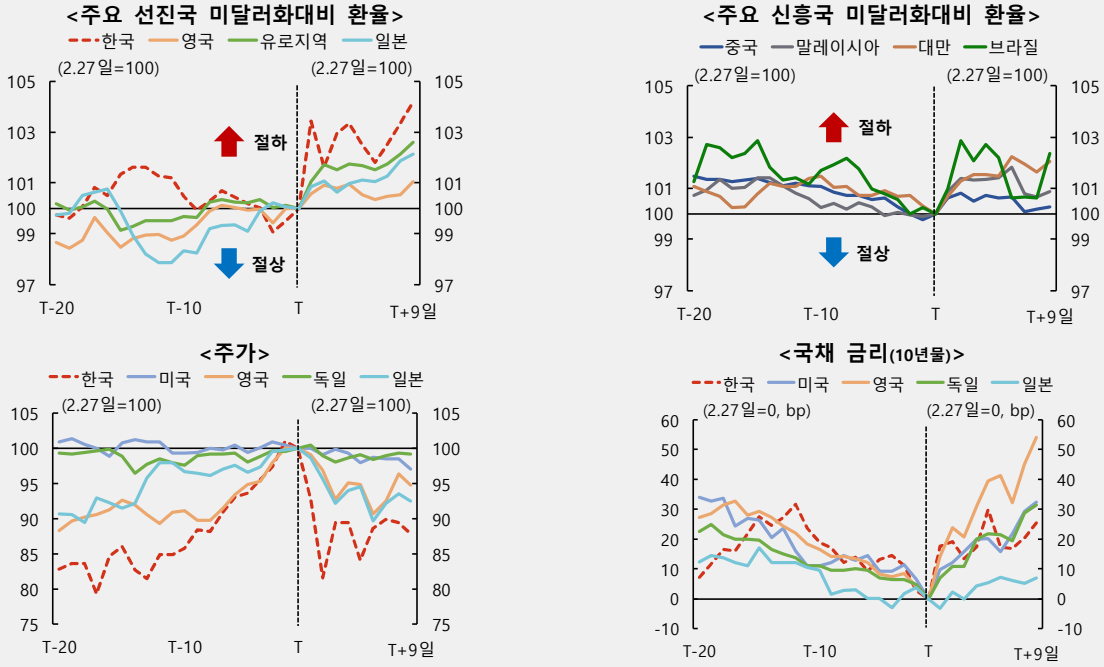
참고 1 중동상황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교란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험회피심리 강화를 통해 국내 외환·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동지역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68] 에너지 수입국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2. 외환·금융시장에서 환율은 올해 2월말 상당폭 낮아졌으나 중동상황 이후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확산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간 빠른 오름세를 보인 국내 주식시장도 중동상황 발생 직후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참고1-1] 중동지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강화가 지속되면서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금리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수록 글로벌 긴축 우려 강화 등으로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69]

[참고 1-1] 중동상황 전후 주요국 금융시장 가격변수 변화[1)]

중동상황 직후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주: 1) 환율 및 주가의 경우 중동상황 직전 영업일(T: 2.27일)의 수준을 100으로 표준화, 금리는 동 시점대비 변동폭(bp)을 의미
자료: Bloomberg

3. 중동상황 전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외국인 주식 매도와 함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해지고 증권사 신용융자[70]도 확대되면서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 데도 기인한다.[참고1-2, 3] 이에 더해 단기적인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올

68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원유 순수입액 비율은 4.6%로 인도(3.6%), 일본(1.8%), 중국(1.7%) 등 주요국에 비해 높으며, 우리나라 원유 수입 지역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70.7%(2026년 1월, 물량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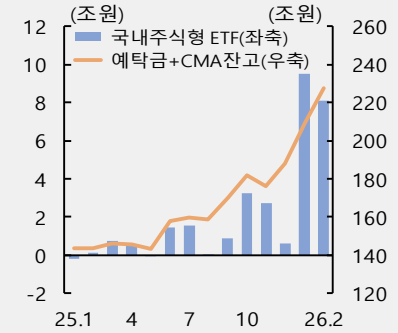
69 코스피는 3.3~4일 연속 큰 폭 하락(전일대비 각각 -7.2% 및 -12.1%)한 데 이어 3.5일에는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매수세 유입 등으로 빠르게 반등(+9.6%)하였으며, 3.9~10일에도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70 신용융자잔액(코스피·코스닥 합계)은 25.11.5일 25.8조원으로 이전 최고치(21.9.13일 25.7조원)를 경신한 후 증가세를 이어가며 26.2월말 32.7조원을 기록하였다.

해 들어 잔액이 2배 가까이 증가(25년말 10.4조원 → 26.2월말 19.7조원)한 파생형 ETF도 변동성 확대[71]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참고1-4]

[참고 1-2] 개인의 주식형 ETF 순매수 및 대기성 자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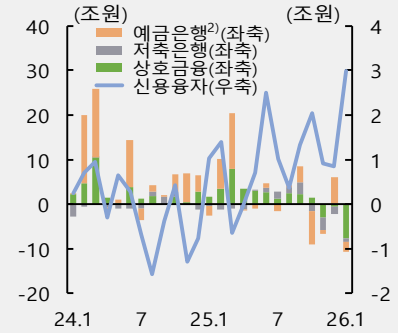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참고 1-3] 금융기관 예수금 및 신용융자 증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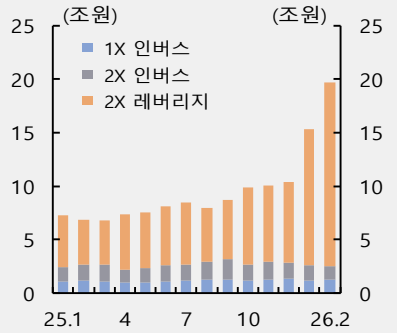
신용융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4/4분기 이후 개인 예금은 감소



주: 1) 전월대비 2) 개인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참고 1-4] 파생형 ETF 시가총액[1)]

올해 들어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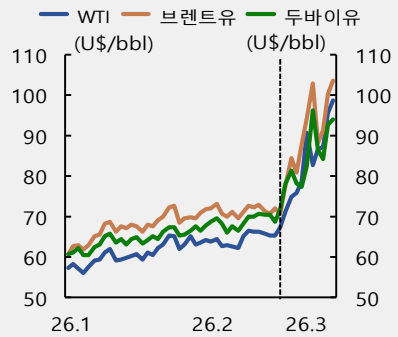
주: 1)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 기준
자료: 인포맥스

4. 중동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은 원가 부담 증가 등을 통해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취약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거나 회사채 차환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물량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원가 상승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재무건전성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다.[참고1-5]

5. 금번 중동상황은 종료시점 및 확전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 금융·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및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가운데,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참고1-6, 7]

[참고 1-5] 국제유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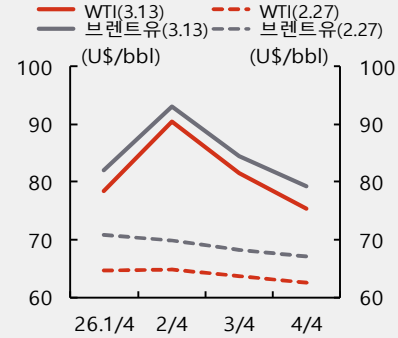
금년 3월 들어 상승폭 확대



주: 1) 점선은 2.27일
자료: Bloomberg

[참고 1-6] 유가 선도가격 변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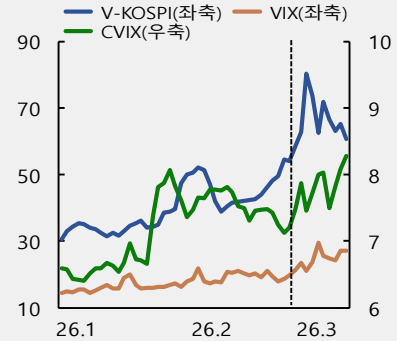
2/4분기 인도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주: 1) 가로축은 인도 시점을 의미
자료: Bloomberg

[참고 1-7] 주요 변동성 지수[1)2)]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주: 1) VIX와 V-KOSPI는 각각 미국과 한국 주가, CVIX는 주요국 환율의 변동성
2) 점선은 2.27일
자료: Bloomberg

[71] 레버리지 ETF의 경우 순자산가치대비 익스포저 비율을 목표 수준(2배)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주가 상승으로 순자산이 늘어나면 매수 포지션을 확대하고, 주가 하락으로 순자산이 줄어들면 매수 포지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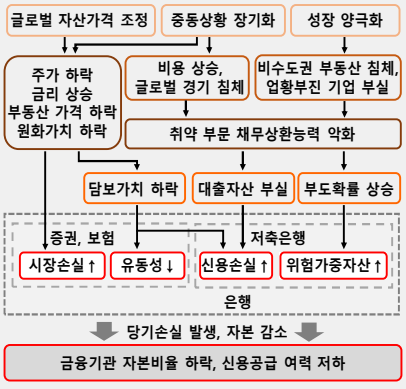
참고 2 주요 취약요인을 고려한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 2026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 성장 양극화 등 취약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글로벌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참고2-1] 중동상황 장기화, AI 관련 주가 고평가 우려 등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조정될 경우 금융기관은 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담보가치 하락과 함께 유동성 여건도 악화될 수 있다.[72] 이러한 금융기관 스트레스 상황은 외국인 자금 유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결합하여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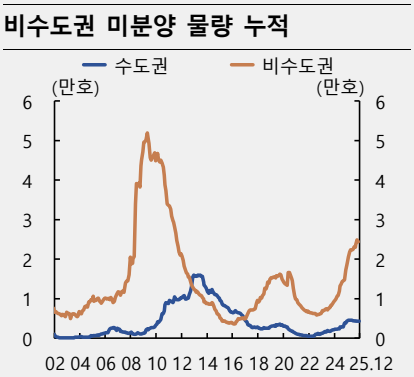
2. 또한 가계, 기업, 부동산 등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성장 양극화는 금융기관 복원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별 주택시장 차별화[참고2-2]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신용리스크가 커지고, K자형 성장이 지속될 경우 장기 업황부진 기업[참고2-3]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한계기업 및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금융기관 부실여신이 증가하고 이는 금융기관 자본비율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본고는 대내외 충격 발생시 상기 취약요인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73]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향후 2년 시계에서 비관과 심각 2가지로 설정하였다. 비관 시나리오[74]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자산 및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동반 급락하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이에 더해 심각 시나리오[75]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동상황이 장기화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실물경제 부진이 나타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보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상정하였다.

[참고 2-1] 취약요인별 금융시스템 충격 주요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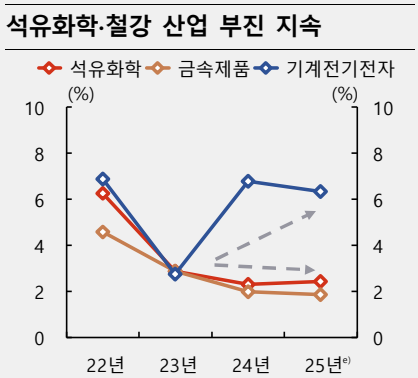


[참고 2-2] 지역별 준공후 미분양 물량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2-3] 총자산 세전순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

[72] 금융시스템 유동성은 자금조달(funding) 유동성과 시장(market) 유동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자금조달 유동성은 자금시장에서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시장 유동성은 자산을 가격 왜곡 없이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이 금융기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후술하는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 관련 금융기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73] 스트레스 테스트는 한국은행 경제전망과는 달리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시·금융변수 충격이 금융기관 손실과 부도확률 상승을 통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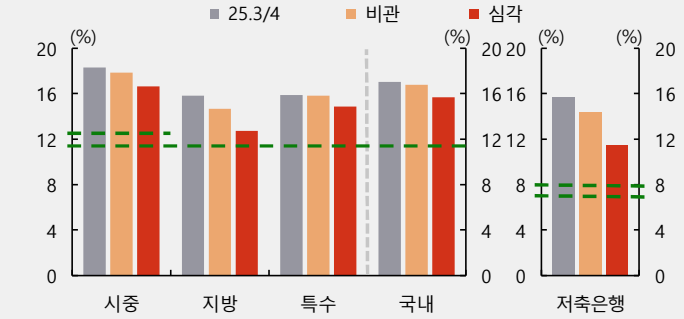
[74] 비관 시나리오는 2020년 팬데믹 위기 수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가는 일시적으로 러·우 전쟁 수준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75] 심각 시나리오는 중동상황 장기화로 유가가 러·우 전쟁보다 높은 수준을 3분기 가량 지속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일부 연구(곽노선(2018) 등)에서 소득분배 불평등도 지표가 경기역행적인 것으로 분석한 점을 고려하여 심각 시나리오에서 성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시스템의 신용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예금취급기관 자본비율은 심각 시나리오에서 상당폭 하락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참고2-4] 다만 실물경제 부진이 장기간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양극화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참고2-5]하는 모습을 보였다.[76] 특히 일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PF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자본비율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났다.[참고2-4]

[참고 2-4] 예금취급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8분기 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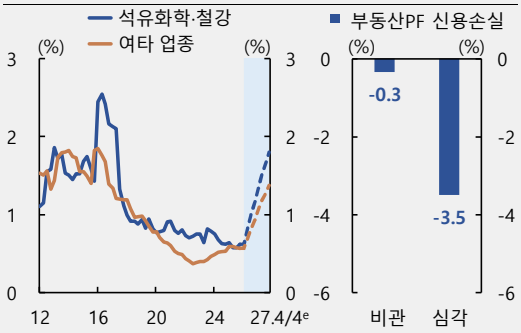
대체로 양호하나 지방은행·저축은행은 자본비율 다소 하락



주: 1) 녹색 점선은 규제비율(은행 11.5~12.5%, 저축은행 7~8%)
자료: 한국은행 시산

[참고 2-5] 국내은행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1] **및 저축은행 부동산PF 예상 신용손실**[2]

업황부진 기업 및 부동산PF 대출부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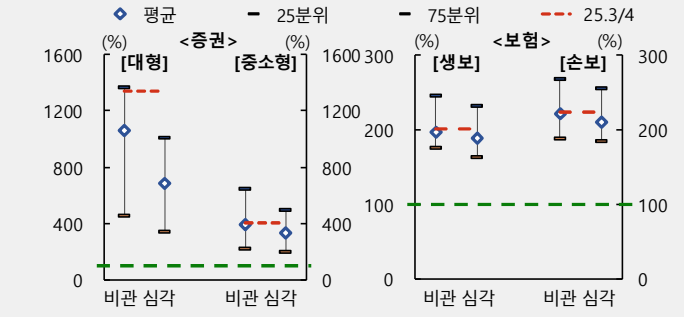


주: 1) 심각 시나리오 기준 2) 자기자본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5. 증권·보험사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며 대체로 양호한 손실흡수력을 보였다.[참고2-6]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권 및 보험사의 손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손실은 심각 시나리오에서 각각 최대 17%, 28% 수준(자기자본 대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참고2-7] 증권사는 시장손실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이 대형사를 중심으로 두드러졌으나 여전히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였다.[77] 한편 상대적으로 자산·부채 듀레이션 차이가 크지 않은 보험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이 부채 평가이익에 의해 상쇄되며 K-ICS 비율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2-6] 증권·보험 자본비율(8분기 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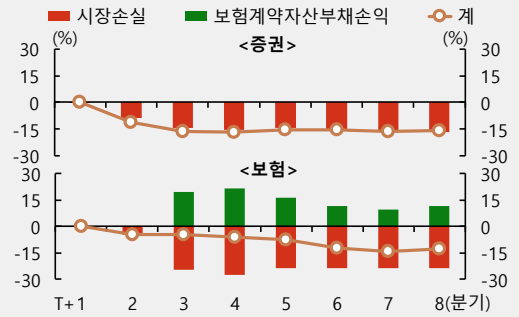
증권사는 높은 자본비율 유지, 보험사는 자본비율 영향 제한적



주: 1) 녹색 점선은 규제비율(증권사 NCR, 보험사 K-ICS 100%)
자료: 한국은행 시산

[참고 2-7] 증권·보험 자기자본 대비 시장손실 규모[1]

증권·보험 시장손실 각각 최대 17%, 28%



주: 1) 심각 시나리오 기준 누적 시장손실
자료: 한국은행 시산

[76] 은행별 석유화학·철강업 대출 비중은 전체 기업대출 중 5~10% 내외로 집중도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7]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증권사 자산규모와 관련 없이 금융투자업무 단위별로 일정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 반면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은 증권사의 자산 규모에 대체로 비례한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자기자본 1조원 이상)일수록 NCR이 높고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잉여자본 하락폭도 커 스트레스 상황에서 NCR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다.

6.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 성장 양극화 등 취약요인이 현실화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계·기업·부동산 등 부문별 양극화가 심화된 구조적 환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자산가격 조정과 같은 복합적인 대외 충격이 특정 취약부문에 집중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예상보다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동 상황 악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취약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극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PF, 한계기업 등 부실 징후가 뚜렷한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부문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력 제고를 선제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 관련 금융기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은 건전성 악화와 유동성 압박이 상호 증폭(solvency-liquidity feedback loop)되면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78] 특히 최근 중동상황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외충격이 국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자금유출은 유동성 리스크로 확대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자산매각(fire sale), 수익성 악화 등 건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유동성 여건을 점검해보았다.

과거 위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은 주로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와 외화자산 익스포저가 큰 보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79] 증권사는 RP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 특성상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차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마진콜[80] 및 채무보증 이행 리스크[81]가 현실화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보험사의 경우 해외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산가격 하락시 평가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며, 변액형 상품[82] 등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할 경우 유동성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이 동반될 경우 외환파생거래 포지션에서 평가손실로 인한 추가 증거금 납입 및 환헤지 비용 상승으로 유동성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78] 자산가격 하락은 평가손실을 통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마진콜 증가가 유동성 압박을 초래한다. 차환이 어려워진 금융기관의 자산매각은 시장 전반의 자산가격 하락압력을 심화시켜 금융시스템 전반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2020년 3월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확인된 바 있다.

[79] 은행은 LCR·NSFR 등 스트레스 기반의 유동성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예금 중심의 안정적 자금조달 구조와 공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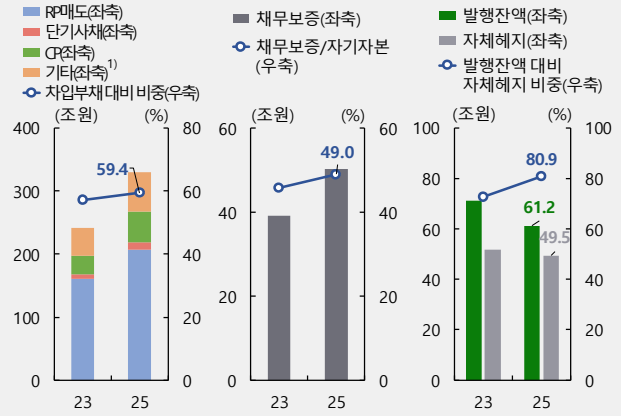
[80] 자체헤지를 통해 E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기초자산(해외주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헤지 포지션에 대한 추가 증거금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81] 증권사가 부동산PF 등에 제공한 매입확약·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기초자산 부실에 따른 ABCP 차환 실패, 차주의 상환불이행 등으로 인해 실제 이행의무로 현실화될 위험을 뜻한다.

[82]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자산가격 하락시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2-8]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익스포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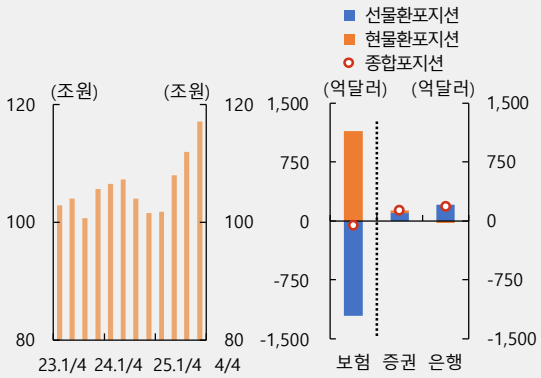
<단기시장성차입> <채무보증> <ELS 발행잔액[2] 및 자체헤지>



주: 1) 콜머니 및 발행어음 2) ELB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인포맥스

[참고 2-9] 보험사 유동성 리스크 익스포저

<변액보험 잔액 추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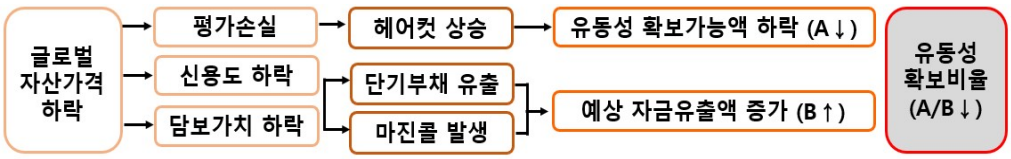
주: 1) 2025년 9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이하에서는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이 증권사·보험사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83] 스트레스 정도는 자산가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 정도에 따라 '비관'과 '심각' 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각 시나리오 하에서 3개월 내 확보 가능한 유동성(A)과 동 기간 예상 자금유출액(B)을 비교한 유동성확보비율(A/B)을 산출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여력을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건전성-유동성 피드백에 따른 전이·증폭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건전성 악화에 따라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자금유출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테스트에 반영하였다.[84]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시 일부 증권사와 보험사는 유동성 저하에 직면하나, 업권 전체의 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심각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증권사·보험사 업권 평균 유동성확보비율은 각각 113%, 321%(비관 기준 182%, 665%)로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5] 증권사의 경우 자본 규모에 관계없이 평균 유동성확보비율이 100%를 상회하였으며, 보험사의 경우 국공채 및 특수채 보유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위기 대응능력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3 동 스트레스 테스트는 50개 국내 증권사의 개별 재무제표(2025.12월 기준), 22개 생명보험사, 31개 손해보험사의 총괄 재무제표(2025.9월 기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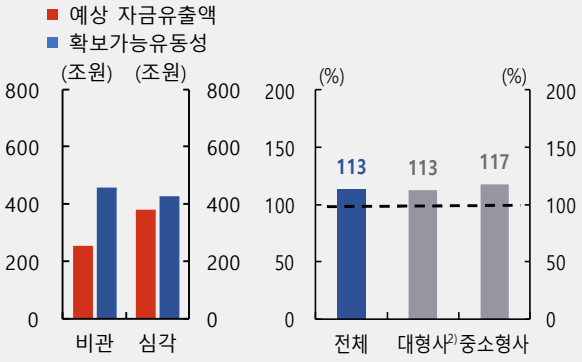
84 비관·심각 시나리오 각각 주가 수준이 20%(코로나19 수준), 30%(글로벌 금융위기 초기 3개월 수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금리 상승폭은 국채 기준 비관 50bp·심각 100bp, 회사채 기준 비관 100bp(레고랜드 사태 수준)·심각 300bp(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로 설정하였다. 자산 헤어컷은 바젤 Ⅲ LCR 규제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산별로 차등 설정하였으며, 유출률은 과거 외환위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단, 보험사의 경우 직전 1년치 지급보험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자산가격 하락이 유동성확보비율에 미치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85 보유 중인 국공채를 담보로 설정하는 비율이 높은 증권사와는 달리, 보험사는 국공채 보유규모가 크면서도 담보설정 비중이 낮아 유동성확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참고 2-10]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

<확보가능유동성(A) 및 예상 자금유출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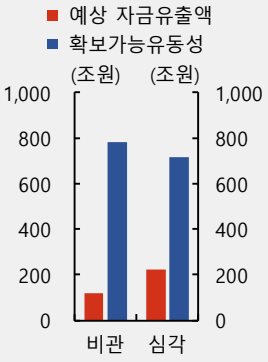


<대형·중소형사 유동성확보비율(A/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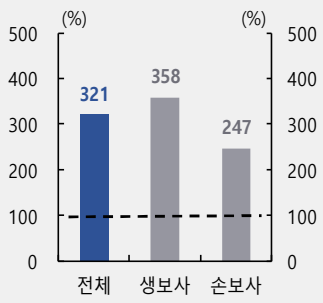
주: 1) 심각 시나리오 기준
2)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자료: 한국은행 시산

[참고 2-11] 보험사 스트레스 테스트

<확보가능유동성(A) 및 예상 자금유출액(B)>



<생보·손보사 유동성확보비율(A/B)[1]>



주: 1) 심각 시나리오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과거 위기 수준 정도의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투자펀드 등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산가격 충격의 전이경로가 다변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86]

[86] 중동상황 여파로 코스피는 역대 최대 일일 하락률(12.1%, 2026.3.4일)을 기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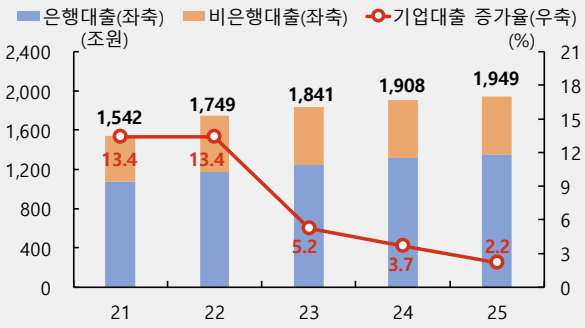
참고 3 기업의 비차입금 부채 활용 현황 점검

1.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은 2023년 이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기업대출 증가율은 2021년 및 2022년중 13.4%에 달했으나[87] 2023년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25년에는 2.2%를 기록하였다. 업권별로 보면, 2025년중 비은행대출은 0.1% 감소하고 은행대출은 3.2% 증가하는데 그쳤다.[참고3-1] 이는 부동산PF 구조조정에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태도를 강화[88]해 온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금융의 경우에도 회사채 및 CP 순발행이 2023~2024년중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5년 들어서는 회사채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89]

2. 이처럼 대출 및 직접금융 등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부진한 가운데, 주가수익스왑(PRS), 상거래 기반 유동화(기업구매카드 및 당좌수표 등) 등 비차입금 부채[90]를 활용한 자금조달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주가수익스왑[91]은 2025년중 발행액이 10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상거래 기반 유동화[92]의 경우, 당좌수표 유동화 채권은 2025년중 약 12조원, 구매카드 유동화 채권은 약 44조원 내외 규모로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비차입금 부채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규모(잔액)는 2025년말 27.5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참고3-2]

[참고 3-1] 금융기관 기업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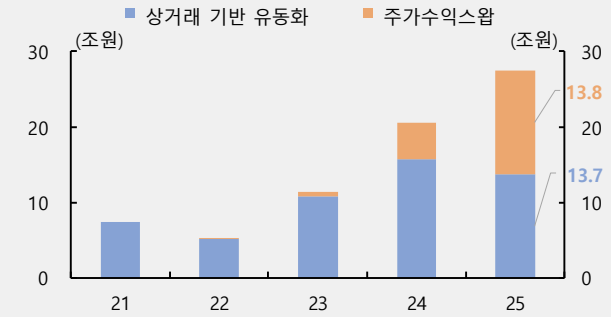
2023년 이후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부진한 모습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참고 3-2] 비차입금 부채 활용현황(잔액 기준)

비차입금 부채조달 규모는 2023년 이후 확대



자료: 각사 공시 및 시장 자료, 예탁결제원

3. 업종별 및 신용등급별로 기업들의 비차입금 부채 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업종 및 비우량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 및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대체 수단으로 비차입금 부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가수익

---

87 특히 2021~2022년중에는 기업자금수요 증가,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기업대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88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연간평균 기준)가 대기업은 2023년 1.5 → 2024년 -0.5 → 2025년 0, 중소기업은 -0.75 → -2.75 → -5.75 등으로 조사되는 등 2023년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태도가 강화되어 왔다.

89 회사채 및 CP 순발행액 합계(조원): 2021년 15.9 → 2022년 5.7 → 2023년 2.3 → 2024년 2.9 → 2025년 7.1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90 신종자본증권이나 조세채권 유동화 조달 등도 비차입금 부채로 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비차입금 부채 중 최근 발행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관련 통계가 가용한 주가수익스왑 및 상거래 기반 유동화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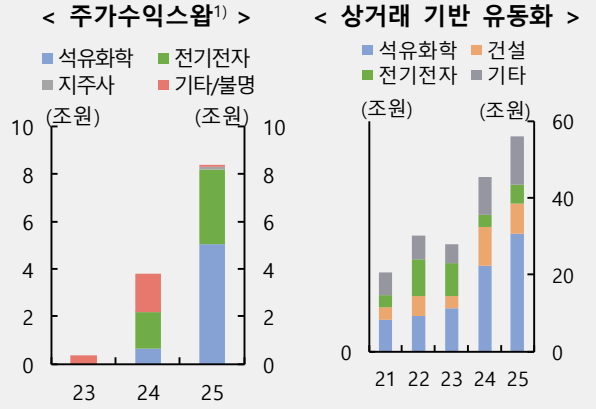
91 기업이 보유 주식(기초자산)을 투자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파생상품계약을 통해 해당 주식의 가격변동분에 대해 추후 정산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기초자산의 주가 상승시에는 기업(스왑 매도자)이 투자자(스왑 매수자)로부터 차액(시장가격-기준가격)을 지급받는 반면 하락시에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92 기업은 당좌수표 또는 구매카드 결제에 대한 지급채무를 금융기관 및 SPC 등을 통해 유동화함으로써 해당 지급채무에 대한 지급기한을 유동화증권 만기(통상 3~6개월)만큼 이연할 수 있다.

스왑의 경우 석유화학과 전기전자(2차전지) 등 최근 업황이 부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용등급별로도 비우량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거래 기반 유동화의 경우에도 석유화학, 건설, 전기전자 등의 업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별로 보면 주가수익스왑에 비해서는 비우량기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일반 CP 등에 비해서는 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93] [참고3-3, 4]

[참고 3-3] 업종별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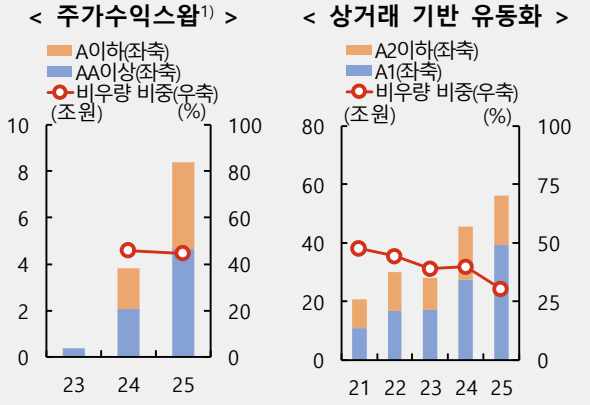
석유화학과 전기전자(2차전지) 등 최근 업황이 부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활용이 확대



주: 1) 공시 등으로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계약건 한정 합산
자료: 각사 공시자료, 예탁결제원

[참고 3-4] 신용등급별 활용현황

비차입금 부채 조달은 비우량 기업의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주: 1) 공시 등으로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계약건 한정 합산
자료: 각사 공시자료, 예탁결제원

4. 비차입금 부채조달은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거래 기반 유동화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단기차입에 가까우나 재무제표 상 매입채무 등 차입금 외 항목으로 인식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실제보다 양호하게 평가될 수 있다. 주가수익스왑의 경우에는 스왑매도 기업의 손익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도 있다.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스왑매도 기업은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야 하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왑매도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시기에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스왑매도 기업의 실적이 더욱 큰 폭으로 악화될 수 있다.

5. 주가수익스왑과 상거래 기반 유동화 등 비차입금 부채는 재무제표상 차입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해당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신용위험 평가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차입금 부채가 기업부문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익스포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이들 부채의 부실이 늘어나더라도 시스템리스크로 즉각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취약업종이나 비우량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 이들 부채의 부실이 트리거로 작용하여 관련 산업 전반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 기업의 재무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동상황 장기화 등으로 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취약업종 가운데서도 석유화학 업종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3] 일반기업의 ABCP 및 ABSTB의 경우 발행잔액 중 비우량물(A2 이하)의 비중이 10~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상거래 기반 유동화 발행액중 비우량물 비중은 2025년 기준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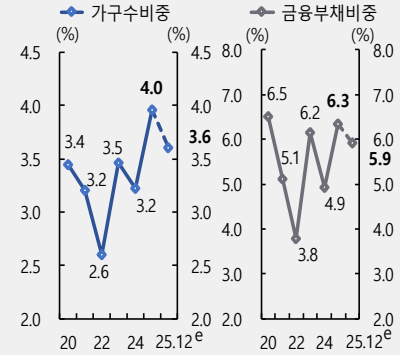
참고 4 고위험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1. 우리나라의 고위험가구[94]는 2025년(25.3월 기준, 이하 '2025년') 기준[95] 45.9만 가구로 전년 3월(38.6만 가구)대비 18.9% 증가하면서 가구수 비중(금융부채보유가구 기준)이 3.2%에서 4.0%로 상승하였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도 전체 금융부채의 6.3%인 96.1조원으로 2024년 3월(4.9%, 72.2조원)에 비해 큰 폭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 부동산 부진이 이어진 데다 가계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24.4월~25.3월)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5년중 자산가격(수도권 주택가격, 주식가격 등) 상승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25년말[96]에는 그 비중이 각각 3.6%(가구수 기준), 5.9%(금융부채규모 기준)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참고4-1]

2. 고위험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년층(40~50대) 비중(53.9%, 가구수 기준)이 여전히 절반을 상회하지만 청년층(20~30대) 비중이 확대(20.3월 22.6% → 25.3월 34.9%)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참고4-2]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 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해 부채차입에 나서면서 여타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 고위험가구의 증가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참고4-3]

[참고 4-1] 고위험가구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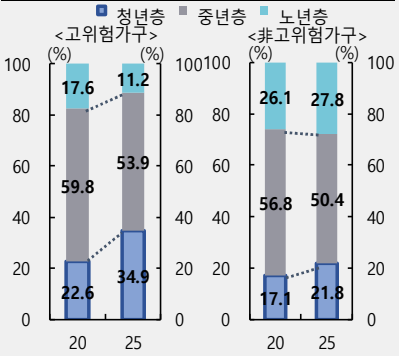
2025년말 고위험가구 비중 감소 추정



주: 1) 점선은 2025.12월말 추정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참고 4-2] 연령대별 변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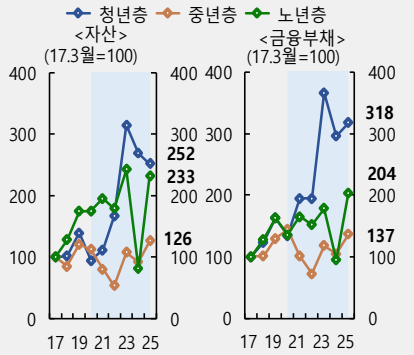
고위험가구 내 청년층 비중 확대



주: 1) 가구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참고 4-3] 고위험가구 연령대별 자산·부채[1)]

코로나19 이후 청년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증가폭 확대



주: 1) 전월세보증금 제외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3. 자산 및 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2025년 고위험가구의 평균 총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은 2.7억원으로 非고위험가구(6.4억원)에 비해 크게 적은 반면 총부채(금융부채+임대보증금)는 2.4억원으로 非고위험가구(1.6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非고위험가구는 예금 등 저축성자산 비중(10.2%)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고위험가구는 자가거주율이 낮아[97] 임차보증금(13.8%)

---

[94]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DTA>100%) 가구로 정의하였다. DSR(Debt-Service-Ratio)은 원리금상환액을 이자비용 차감 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DTA(Debt-To-Asset ratio)는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자산 형태별 환금성을 고려한 회수율 적용)으로 나누어 시산하였다.

[95]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표에서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은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항목은 직전년도 연간(1.1일 ~ 12.31일) 기준으로 작성된다.

[96] 2025년 12월말 고위험가구는 2025년 3월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2025년중 가계대출금리 변동,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지표 변화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97] 2025년 고위험가구의 거주형태별 가구수 비중은 월세(52.5%), 자가(23.0%), 전세(19.9%), 기타(4.6%) 순이며 非고위험가구는 주거 안전성이 양호한 자가 비중(63.1%)이 월세(19.6%), 전세(14.7%), 기타(2.6%)보다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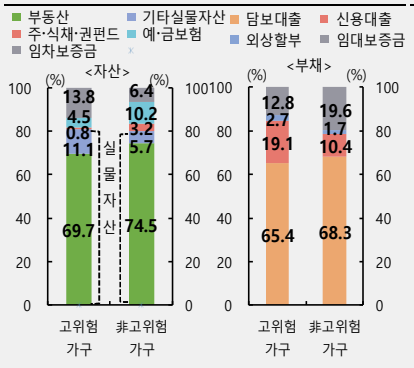
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현금 유동성 대응능력이 낮은 편이다. 또한 고위험가구는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큰 신용대출(신용카드대출 포함) 비중(19.1%)이 非고위험가구(10.4%)보다 높아 금리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4-4]

4. 소득분위별 및 지역별로는 저소득·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고위험가구 내 고소득(소득상위 20%, 5분위) 및 저소득(소득하위 20%, 1분위) 가구간 평균 순자산[98] 차이(1.4억원)는 2020년(0.4억원)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소득분위별 자산규모 격차가 점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다만 고소득 고위험가구의 경우 非고위험가구와 달리 실물자산의 증가와 함께 금융부채도 크게 늘어나 상당한 금융부채 차입을 통해 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참고4-5] 한편 최근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지속되면서 지방 고위험가구는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99] 수도권 고위험가구의 경우 DTA가 2024년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서울 고위험가구의 DTA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한 반면, 지방은 2025년중 상승세로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참고4-6]

5.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일부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그간의 금융여건 완화[100]로 차주의 이자부담도 경감되면서 2025년 3월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의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증가가 컸던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4-4] 자산 및 부채 비중[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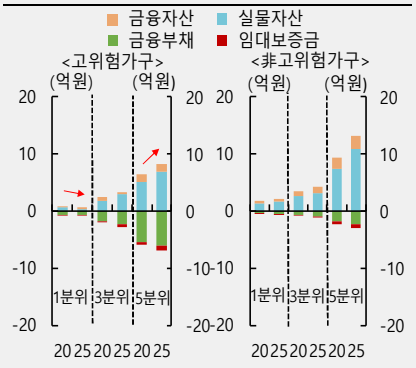
고위험가구는 자산 내 임차보증금 비중과 부채 내 신용대출 비중이 높음



주: 1) 2025.3월 기준
2) 개인간 채무는 제외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참고 4-5]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규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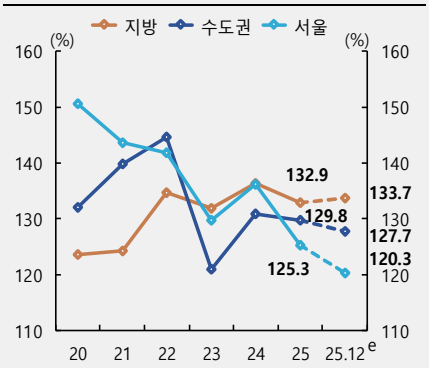
저소득·고소득간 자산규모 격차 확대



주: 1) 가구당 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참고 4-6] 지역별 고위험가구의 평균 DTA[1)]

지방 고위험가구의 DTA는 상승 전환으로 추정



주: 1) 점선은 2025.12월말 추정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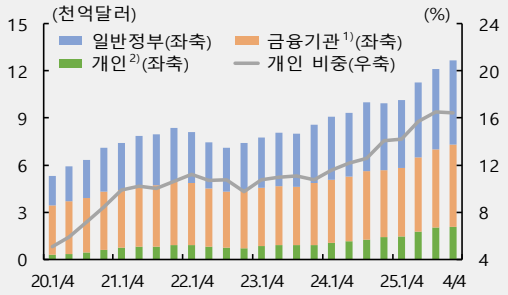
98 가구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임차보증금 포함) 합계에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합계를 차감하였다.
99 2025년 수도권 및 지방의 고위험가구 비중은 가구수 기준으로 각각 4.7%(28.6만가구) 및 3.1%(17.3만가구)로 수도권이 높지만 금융부채규모 기준으로는 수도권 5.2%(45.9조원), 지방 7.9%(50.1조원)으로 지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 2024년 10월 이후 4차례 기준금리 인하(-100bp) 등에 힘입어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가 5.08%(23.12월말, 최고점)에서 4.31%(25.12월말)로 하락하였다.

참고 5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상황 평가

1.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2023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말 총 1조 2,661억달러[101]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개인[102]의 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며 2024년중에는 연간 증가폭이 금융기관을 상회하였다.[참고5-1, 2] 개인이 투자한 국내상장 해외펀드의 경우 기초자산(해외증권)의 직접적인 매입 주체가 자산운용사 등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투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5-1] 투자주체별 해외증권 보유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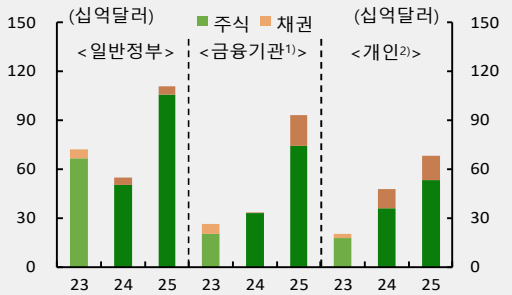
해외증권투자 잔액에서 개인 비중이 상승



주: 1)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2) 개인, 비금융기업 등
자료: 한국은행(국제투자대조표)

[참고 5-2] 투자주체 및 해외증권 종류별 잔액 변화

24년중 개인의 증가폭은 금융기관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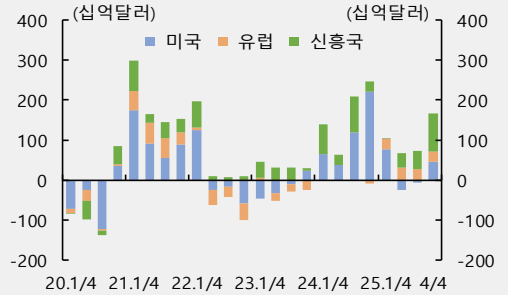


주: 1)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2) 개인, 비금융기업 등
자료: 한국은행(국제투자대조표)

2.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글로벌 자금 흐름은 지난해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이 부각되며 한동안 순유출(2/4~3/4분기)로 전환되는 등 투자 수요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참고 5-3, 4] 특히 최근 고평가 우려 등으로 미국 주요 기술주 주가가 부진[103]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세제 혜택과 낮은 운용보수[104] 등으로 인해 ETF를 통한 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참고 5-3]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지역별 순유입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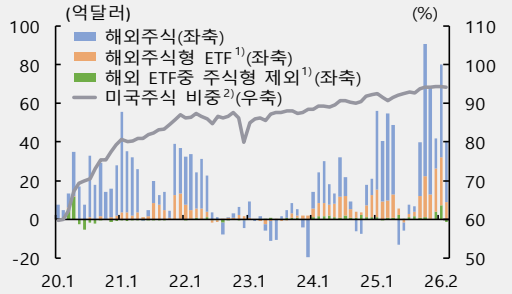
글로벌 자금의 미 주식시장 유입은 최근 주춤한 모습



자료: EPFR

[참고 5-4] 투자 형태별 개인의 해외증권 순매수 규모

ETF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



주: 1) 26.2월말 기준 상장 ETF 대상
2) 국내 개인투자자의 전체 해외주식 예탁금액 대비 미국주식 예탁금액 비중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Bloomberg

---

101 투자주체별 규모는 국민연금이 포함된 일반정부가 5,368억달러(42.4%)로 가장 크고 금융기관이 5,214억달러(41.2%), 개인이 2,080억달러(16.4%) 순이다.

102 국제투자대조표의 투자 주체중 '비금융기업등'을 개인으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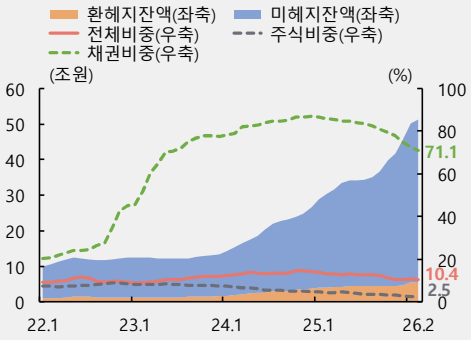
103 2026년 2월말 기준 S&P500 편입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2025년 9월말대비 3.1% 증가한 반면, 동 기간중 주요 기술주(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MS, 아마존, 메타 및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4% 감소하였다.

104 2023년부터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6년 2월말 기준 해외 ETF 실부담비용(매매·중개수수료 포함)의 펀드별 평균은 0.65%로 여타 펀드(1.3%)의 절반 수준이다.

3. 개인의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나,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105] 다만 개인투자자의 수요가 많은 주식형 해외 ETF의 경우 미헤지(unhedged)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106]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하반기중 크게 높아졌던 원/달러 환율이 연말부터 낮아지면서 환헤지 수요가 늘어났다.[참고 5-5, 6] 환헤지 ETF 상품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선물환 매도를 통한 헤지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현물환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효과[107]가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108]

[참고 5-5] 개인의 해외 ETF 누적 순매수 규모[1] 및 환헤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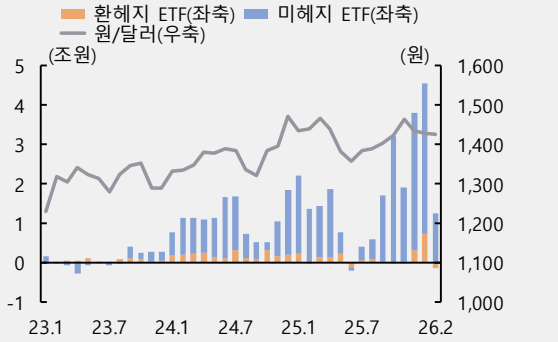
환헤지 비중은 24년말 14.3%에서 26.2월말 10.4%로 하락



주: 1) 26.2월말 상장 ETF를 기준으로 15년 이후 순매수 규모를 누적 합산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참고 5-6] 개인투자자 해외 ETF 순매수 규모

최근 환헤지 ETF 순매수가 증가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한국은행

4. 그간 미헤지 주식형 상품을 중심으로 개인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된 것은 오랫동안 형성된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높고, 환율 수준에 대한 기대와 경제 펀더멘털 간 괴리가 아직 남아있는 데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인투자자 환류 및 환헤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109]를 마련중인 만큼,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해외주식 환헤지 상품의 개발과 공급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외환 수급의 균형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05 주요 금융기관(은행, 증권 및 보험사)도 보유한 외화증권 잔액(업무보고서 기준)이 2022년 4/4분기말 198.2조원에서 2025년 3/4분기말 275.1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외화 부채를 감안하면 순외화 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거나 환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손실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106 개인투자자의 환헤지 ETF 누적 순매수 규모(15년 이후)는 2024년말 3.8조원에서 2026년 2월말 5.4조원으로 늘어났지만 동 기간중 전체 해외 ETF에서 환헤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서 10.4%로 줄어들었다. 이는 주식형의 환헤지 비중이 2026년 2월말 2.5%로 채권형(71.1%) 등 여타 상품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상품수 측면에서도 2026년 2월말 기준 전체 해외 ETF 상품(446개, 국내와 해외에 동시 투자하는 상품은 제외)에서 주식형이 3/4을 상회(347개, 77.8%)하고 있지만 주식형중 환헤지 상품은 13.5%(47개)에 불과해 판매 상품의 절반(40개 중 20개)이 환헤지로 운용되는 채권형 ETF 상품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107 선물환 매도 거래의 상대방이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선물환 매수 포지션에 상응하는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 포지션이 필요하다.

108 미헤지 상품의 누적이 심화될수록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현물거래 수요가 늘어나 외환 수급 불균형 및 환율 쏠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환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09 지난해 12월 정부는 해외주식 매도자금으로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환매도 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과 함께 올해 3월 국내시장 복귀계좌가 출시되었다.

부문별 담당팀 및 집필자

부문	담당팀	집필자
작성총괄	안정총괄팀	김정호
Ⅰ. 종합 평가	안정총괄팀 시스템리스크팀	김자혜·홍세림 황지영·김창훈
Ⅱ. 부문별 상황		
1. 가계 및 기업 신용		
(1) 가계신용	안정총괄팀	홍준선·홍세림
(2) 기업신용	안정분석팀	이준성·남지윤
(3) 신용 레버리지	안정총괄팀	홍준선·홍세림
<BOX 1>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안정분석팀	편도훈·손희주
2. 자산시장		
(1) 채권시장	채권시장팀	이진우·추승식
(2) 주식시장	주식시장팀	최대한·김예은
(3) 부동산시장	안정분석팀	김동욱·정서영
(4) 기타 자산시장	비전통금융분석팀	박상훈·김민수·김진
<BOX 2>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안정분석팀	김동욱·정서영
3. 금융기관		
(1) 은행	은행분석팀	박성경·조은정·최성우
(2) 비은행	중소금융분석팀 증권보험분석팀	문지희·홍준유·강정운 이영선·김상욱·황보현
<BOX 3>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현황	은행분석팀	조은정·최성우
<BOX 4> 증권회사로의 자금 유입 동향	증권보험분석팀	김상욱
4. 대외부문		
(1)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	외환시장팀 자본이동분석팀	김영웅·방누리 신상호·이주현
(2) 자본유출입	자본이동분석팀 해외투자분석팀	임준혁·한창현 윤세진·안서연
(3) 대외지급능력	자본이동분석팀	신상호·한창현
5. 금융제도 및 정책	금융제도팀	주문석·황다슬·오건우
<BOX 5>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과제	비전통금융분석팀	박상훈·김민수·김진
[참고]		
<참고 1> 중동상황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안정총괄팀 시장총괄팀	나성오·안소희 권순성
<참고 2> 주요 취약요인을 고려한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시스템리스크팀	황지영·강수연· 김창훈·권이태
<참고 3> 기업의 비차입금 부채 활용 현황 점검	안정분석팀	이준성·남지윤
<참고 4> 고위험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안정총괄팀	고은아·이수연
<참고 5>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상황 평가	안정총괄팀 시스템리스크팀	나성오·안소희 권이태

검토자			
금융안정국 부장	이정연·정연수·조규환	**부국장**	안상기
팀장	문용필·김혜연·강정미·김경섭·이혜진·이신영·조성민·이현창·조은아·박나연		